정·책·담·당·자·가·만·드·는·경·제·전·문·지

나라경제

2001. 10



IMF 졸업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 해설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
쌀산업 경쟁력 강화
IT산업 성장의 견인차, 전파산업

이 달의 초점 전월세난 및 주택수급 불균형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2001년 10월 1일 발행 · 제12권 제10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KDI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114 · 월간 ISSN1227-8033 10

나라경제

2001년 10월호
통권 제131호



2001년 9월호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농림부 농업정책국

4 **권두칼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위하여/박재규 · 前통일부장관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농림부 농업정책국

10 **특별대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최동규 중소기업청장 vs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특집 IMF 졸업 - 의미와 향후 과제

16 공정한 시장제도와 효율적 보상체제를/이필상 · 고려대학교

21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최흥식 · 한국금융연구원

26 '시장' 조성과 작동시스템 구축을/김석중 · 전국경제인연합회

30 훼손된 신뢰의 회복이 급선무/유홍준 · 성균관대학교

34 '졸업'은 또 다른 '시작'/김준원 · 서강대학교

39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 주력/박재식 · 재정경제부

이 달의 초점
전월세난 및 주택수급 불균형

46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부문은 공공에서 전담해야/하성규 · 중앙대학교

49 '주택건설' 중심에서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을/윤주현 · 국토연구원

52 임대주택 공급 지속적으로 확대해야/김성식 · LG경제연구원

56 전월세 부담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한만희 · 건설교통부

60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 - 이원종 충청북도지사
66 **21C 정보통신·바이오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충청북도**/이종배 · 충청북도
70 **경제수상** 주5일 근무! 새 시대가 열린다/백일천 · 노동부

경제동향
72 세계경제 동반침체로 우리 경제의 둔화 심화/송인창 · 재정경제부
76 아프리카연합의 논의동향과 전망/김홍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정책해설
82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이용걸 · 기획예산처
86 쌀산업 경쟁력 강화/김종진 · 농림부
90 IT산업 성장의 견인차, 전파산업/이근협 · 정보통신부
94 개도국 우수 연구인력 유치/송우근 · 과학기술부
98 아시아 · 태평양 공동체 구축/지혜양 · 외교통상부
102 '기상기술 발전 비전' 수립/이종국 · 기상청

공공부문경영혁신
106 특허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감동/최규완 · 특허청

기업정보
110 단체수의계약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김석호 · 공정위
114 공단폐수 배출로 인한 벼 피해/안승호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118 **새로 나온 책**
120 **나라경제 광장** 물류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이병근 · 재정경제부
123 **경제만화** 해양수산 상식(7)/해양수산부
127 **한국경제에 관한 외신보도 동향**
132 **주요 경제지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 : 이원종 충청북도지사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KDI 경제정보센터

발행인/강봉균 · KDI 원장
편집인/조성익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박철규 ·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최종현 · 통상정보지원팀장
과학기술부/이문기 · 정책총괄과장
농 림 부/정병학 · 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남기만 · 행정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정경원 ·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박헌열 · 기획예산담당관
환 경 부/김지태 · 정책총괄과장
노 동 부/김헌수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박상규 ·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김성진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처/배국환 · 예산제도과장
공정거래위원회/한철수 · 총괄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박환균 ·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홍용웅 · 총괄조정팀장
KDI 경제정보센터/조병구 · 연구위원
편집간사/정낙민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집장/김인철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이기덕 · 원동업 · 이지은
업무/김석화

인쇄/(주) 유성사

표지 디자인/예 진
사진/김춘식
일러스트/오진목

나라경제 · 2001년 10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2권 제10호 (통권 제131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KDI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 FAX (02)3295-0748
홈페이지 주소 : http://epic.kdi.re.kr
인터넷e-mail:nara@kdi.re.kr
천리안: kcee

기사문의 : (02)958-4632, 4634~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26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위하여

박 재 규
前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장



남북관계의 기상에 구름이 낀 상태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최근 북측이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의해 오기 이전까지는 남북대화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남남갈등(南南葛藤)이 증폭되고 있다. 8 · 15 평양축전에 참가한 일부 민간단체의 구성원들이 북한의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하면서 촉발된 남남갈등이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극한상태에 이르렀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던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 남남갈등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준비해 가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문제의 땅'이 아니라 '가능성과 희망의 땅'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발상의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그 경로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21세기 한반도 시대의 비전을 제시할 정도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원천이 협애(狹隘)한 정파적 이익이라면, 상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구름은 언젠가는 걷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다. 굴곡과 주기는 인간사에서도 상존한다. 그러나 자연과 달리 인간사의 惡순환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善순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도약의 순간에서 주저앉아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국가들의 경험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연이은 남북관계의 제도화 시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다면, 이제 힘찬 비약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회귀(不回歸)의 지점을 통과한 것은 아니다. 도약의 발판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의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게 되면, 개방형 小國인 우리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失機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기상의 쾌청을 위한 출발점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귀결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하는 이익을 조정하면서 '공공이익(public interests)'을 만드는 정치의 복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극복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익이었다. 개방형 소국경제의 속성상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합의의 정치야말로 위기 극복의 동력이었다.

그 정치적 안정을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힘이 바로 남북관계의 역사적 대전환이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초석이었다.

소강상태의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이다. 경의선 연결과 같은, 남북한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大動脈을 복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업이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이익과 국가이익을 고민하는 합의의 정치를 대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교착이 한반도 주변환경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미관계의 후퇴가 경의선 복원사업의 부진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합의의 정치와 더불어 세계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신한국책략(新韓國策略)'을 구상할 때라고 생각한다. 大國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운명이 국제정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비관론을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탈냉전 시대의 단극(單極) 패권국가인 미국의 경쟁이 한반도의 비극적 지정학의 재생산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 틈새에서 한반도의 자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다면,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규범이 힘을 위한 투쟁만이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현실적 힘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안정과 번영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동아시아의 불안으로,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탈냉전의 시대에서 '국제적 공공재(public goods)'가 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유럽연합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가 개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국제적 공공재라는 사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 동의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도출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21세기 신한국책략의 출발점은 합의의 정치다. 북한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남남갈등이 한 차원 높게 승화될 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대국의 경연장인 국제정치경제의 무대에서 개방형 소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도적인 행위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면밀히 고구(考究)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준비하는 민족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림부 농업정책국은
중장기 농업 · 농촌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국토면적의 19%에 달하는 189만ha의 농지와
230조원의 농업금융, 후계농업인 · 전업농 등
20만명의 전문농업인력 등 한국농업의 기초
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농림부의 주무국이다.
농업정책국은 중요한 전환점마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부 http://www.maf.go.kr)



앞줄 왼쪽부터 배종하 농업정책과장, 소만호 농업정책국장, 박성자 여성정책담당관
뒷줄 왼쪽부터 김규억 사무관, 진기형 서기관, 김정희 사무관, 나승렬 농지과장, 이양호 협동조합과장

농업정책국은 1990년대초 구조개선국, 1990년대 중반 농정기획심의관실의 후신이다. 중장기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면적의 19%에 달하는 189만ha의 농지(토지), 총여수신고 230조원의 농업금융(자본), 후계농업인·전업농 등 20만명의 전문농업인력(노동) 등 농업의 기초 자원을 관리하는 농림부의 주무국이다.



농업정책국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 전환점마다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을 제시

1990년대 이후 한국 농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농정국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1994년의 농어촌 발전대책과 42조원 투융자계획, 1998년의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모두 농정국의 작품이다. 지금은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대응하여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업·농촌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농정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시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는데다 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과 1담당관실의 업무가 모두 만만치 않으면서 각각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도 "농정국은 업무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곤 했다.

올해 5월부터 농정국을 이끌고 있는 소만호 국장은 행정고시 18회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소 국장은 축산국장·유통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쌓은 농업실물경제에 대한 두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농정 전반의 방향타를 노련하게 잡아나가고 있다.

부하들에게 엄격한 상사로 비치는 경우도 많지만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업무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 국장과 일하면 불필요한 수고를 덜면서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농업정책과는 '농림부 주무국의 주무과'로서 농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의 개발과 도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앞서 말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대책'과 '42조원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여 1990년대 한국 농업의 구조개선을 주도하여 왔고 그에 이은 1998년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45조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도 농업정책과의 손을 거쳐 탄생하였으며 농업·농촌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본틀을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내년부터는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업을 유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예정으

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농업정책과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업무로는 북한이나 동북아시아지역을 포괄한 농업협력 업무가 있다. 북한에 대한 비료 등 농자재와 식량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한국농업의 발전과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연해주 등 동북아시아지역과의 농업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는 배종하 과장은 행정고시 23회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협력과장 시절 통상 전문가로서 국내외에 명성을 얻었고 올해초 농업정책과를 맡은 후에는 각국 농업과 농정의 흐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재'로서의 농지 보전과 농업벤처기업 육성에 주력

▲농지과는 국토의 19%를 차지하는 농지의 보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농지가 환경을 지키는 '환경재'로서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농지과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보전에 관한 기본법인 「농지법」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쌀산업의 규모화와 쌀전업농 육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이외 용도로 전환되는 농지를 대신할 대체농지의 조성 및 영농규모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연간 1조원 규모의 농지관리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농지과는 농림부의 대표적인 '민원과'다.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문의에서부터 지역개발에 관한 건의까지 연간 3천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서류민원' 및 '인터넷민원'과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나승렬 농지과장은 행정고시 26회로 부산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자타가 공인하는 '농지전문가'이다. 민원이 많아 긴장되기 쉬운 농지과를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분위기 좋은 과로 만드는 데는 나과장의 업무 스타일과 통솔력이 큰 몫을 담당했다는 평이다.

▲농촌인력과는 21세기 지식농업을 선도해 나갈 정예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법인 육성, 농업경영혁신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업인력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동안 20만명에 달하는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을 육성하였지만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어,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을 다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고 이들의 경영사례를 홍보·전파하여 지식농업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 추진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올해 들어 농촌인력과의 업무 중점은 농업벤처기업의 육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업벤처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한 결과 2001년 9월에는 최초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되는 등 첫 결실을 거둔 바 있다. 향후 3~4년 후면 한국 농업의 모습을 몰라보게 바꾸어놓을 혁신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다.

농촌인력과를 이끌고 있는 정문섭 과장은 중국 국립정치대를 거쳐 중국 농업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국통이다. 駐中농무관 · 행정관리담당관을 역임하고 지난 1월부터 농촌인력과장을 맡고 있다. 중국농업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통합 농협' 성공적으로 출범

▲협동조합과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 1,388개 일선 농협 및 축협을 지도 · 감독하고,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며,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수립 · 추진, 협동조합 개혁의 지원 및 관리, 농업인 세계경감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장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로 손꼽히는 농 · 축 · 인삼협 중앙회를 지난해 7월 1일 통합하여 새로운 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고, 지난해 10월 9일 농협중앙회와 함께 제2단계 개혁방안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가 부채 상환 연기와 금리 인하 등 농업인에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양호 협동조합과장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AIT) 석사 과정을 마쳤다. 무역진흥과장 · 駐OECD 한국대표부 농무관 · 행정관리담당관 · 투자심사담당관을 역임하였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3월 신설되었다.

최근 영농 형태가 여성의 노동 의존도가 높은 원예 · 축산으로 변화되면서 여성의 경영능력 향상은 농업경쟁력 강화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 · 농촌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 주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농촌현실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여성 후계농업인 육성 등 전체 농업인력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이끌고 있는 박성자 담당관은 서울여자대학을 졸업하고 30여년간 농촌 현장에서 농민운동을 이끌어 온 농업전문가이다. 1998년 6월 첫 공직을 시작했다.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크다. 농업정책국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힘입어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글 · 최재석/연합뉴스 기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농업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에서 인터넷과 상거래를 배우고 있는 농업인들.



특별대담

최동규 중소기업청장

대담: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여건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데, 현장 경기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 지난 8월말 11개 지방청을 통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경기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2001년 3/4분기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생산 · 내수 ·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BSI가 기준치인 100 이하를 기록하여 상반기에 이어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4분기 전망경기는 3/4분기보다는 밝지만, 여전히 BSI가 100 이하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업체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중소기업은 일반중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는 BSI기준치인 1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국내전반의 경제가 어려운데다 최근 미국 테러사건의 여파로 단기간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지난 30년간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중소기업청장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중소기업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큰 틀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임기라는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학계나 연구기관들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존립근거는 이질다원적이고 미개발 · 미개척 분야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화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확인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틀 안에 끼우려고 할 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겠지요.

—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을 매년 1천개 업체씩 발굴 · 지원하여 5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전통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IT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3만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여 투자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지방확산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산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저변을 확충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1997년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벤처붐을 일으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최근 코스닥 폭락, 주가조작 등으로 분위기가 급랭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 이러한 침체기는 벤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긍적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력 있고 건전한 벤처기업마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하는 등 벤처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민관공동으로 1조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투자층을 발굴하여 침체된 벤처 투자 분위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애로 해소를 위해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여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해외 프라이머리CBO발행을 통해서도 3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해외투자유치, 현지법인설립, 해외 합작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11개국에 해외거점을 확보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벤처기업의 확인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벤처캐피털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중소기업청이 벤처육성을 너무 강조하여 전통 중소기업이 정책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정책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생각입니까?

▲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4대 신산업(IT, BT, ET, NT) 육성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을 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반 중소기업의 벤처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벤처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고, 제조업을 포함한 어떠한 기업도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기업의 IT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전략적 제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제조업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쌍두마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금융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커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자금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공급확대와 시중자금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2조2,391억원의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또한 은행자금 1조원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은 없으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정책자금 신용대출 1,450억원, 신용보증지원

40조원 이상, 어음보험 인수 4,200여억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접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발행으로 1,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발행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3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발행 지원,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 조성 등 다양한 자금조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임하신 후 청장께서 제안하신 TDI운동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TDI란 'Team for Dreams Innovation'의 약자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내자는 운동입니다.

과장 1인 사무관 2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본연의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모든 형식적인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중소기업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1개팀이 구성되어 2개월 시한으로 운영되어 수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아이디어 신기술 타당성 지원'과 같은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다시 2차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재임중에 꼭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중소기업의 본질은 자유와 자율이며 또한 중소기업은 경쟁과 기술혁신의 원천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인 자신이나 국민들 모두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일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는 규모에 대한 편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큰 것은 훌륭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큰 것은 좋고 아름답다는 편견을 고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므로 중소기업은 세계 1등상품을 1개라도 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정보화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대담자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1954년生.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직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한국 기업의 첨단기술 획득전략과 성패요인」 등이 있다.

공정한 시장제도와 효율적 보상체제를



이필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phillee@korea.ac.kr)

우리 경제는 지난 8월 23일 195억달러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경제는 마치 난파선과 같았다. 외환보유액이 39억달러밖에 안되어 국가경제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10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의 압박에 눌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이후 온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며 위기 극복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리고 180만명에 이르는 실업의 고통을 감수하며 허리띠를 조르고 피눈물나게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했다. 그로부터 3년 8개월 만에 1천억달러에 가까운 외환 보유액을 확보했다. 그리고 IMF에 진 빚을 청산한 후 경제주권을 되찾아 왔다. 실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구조개혁 미완과 경기침체로 IMF 빚 청산의 의미 가려져

IMF 졸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현실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문제는 경제의 구조개혁이 아직 미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 하이닉스 · 대우자동차 · 현대투신 · 서울보증 등 부실기업과 부실 금융기관들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투입된 137조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율은 25%에 불과하다. IMF를 졸업했다고 하나 국민의 짐은 여전히 남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보통신 산업이 침체하면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경제가 기력을 상실했다.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줄었다.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는 10%나 감소하고 물가는 5%나 오르고 있다. 또 고용 구조도 일용직과 계약직이 절반이 넘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경제정책에 대한 색깔 논쟁이 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공적자금 투입, 노사정위원회 등 정

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펴고 있는 정책들은 사유재산을 불허하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적자생존의 경쟁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원리에만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시장독점 · 소득격차 · 환경오염 등 갖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능력이 부족한 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제도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무너지는 경제를 막자는 시장 보호적 행위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자는 합의체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정책들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정책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IMF 조기졸업은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체제는 주가하락과 경기악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 심화를 불렀다. 또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사회의 이분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기업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측면이 있다.

높아진 대외의존도와 소득격차 심화 등 과제 남아

경제가 난관에 처한 것은 세계경제 불황이 직접적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우리 경제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못한 것이 더 문제이다.

우선,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요구한 구조개혁 정책은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IMF가 요구한 고금리 긴축정책은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주가는 하락하고 경기는 악화되었다.

이어 IMF가 요구한 경제 개방정책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대외의존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현상을 낳았다. 증권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삼성전자 · 포항제철 · SK텔레콤 · 국민은행 · 주택은행 등 대표 기업들의 지분이 절반 이상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이 가운데 정부는 1998년말 개혁을 일단락짓고 경기활성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1998년 -5.8%이던 경제성장률이 1999년 10.7%로 급속도의 회복을 했다. 그러나 이는 근원적인 경제 회복이라기보다는 일시적 회복의 성격이 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다시 침체로 돌아서고 설상가상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수출과 투자가 급감하자 경제는 다시 난관을 맞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외형적으로는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내면적으로는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실로 커다란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 중 가장 큰 사회적 고통이 바로 소득격차 심화이다. 상당수의 고소득층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자소득 · 증권이익 · 환차익 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혜택을 누렸다. 반면 중

산층과 서민층은 실업과 감봉 그리고 사업 실패 등으로 큰 고통을 부담했다. 이에 따라 사회가 이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도 더욱 심각해졌다. 도덕적 해이는 IMF 위기를 초래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대표적 사례이다.

재벌 기업들은 금융기관 자금에 의존하여 갖가지 사업을 벌였다. 이때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벌여 성공하면 기업주는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위험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되어 금융기관이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실제 재벌들은 계열사간의 상호 지급보증을 통한 엄청난 규모의 부채 차입으로 몸집을 키웠다. 금융기관들은 이들 기업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구제금융을 통하여 도산을 막아 주는 경우가 흔했다. 결국 금융기관 돈으로 재벌들의 이익 독점을 보장해 주는 도덕적 해이가 경제를 부실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재벌들이 최근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구조개혁을 부정하고 있어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없는 은행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무분별한 여신 정책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IMF위기가 오자 이들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들은 한 푼이라도 공적자금을 더 받기 위해 애를 쓴다. 공적자금을 받으면 부실의 책임을 감출 수 있고 자구 노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결국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경제로 하여금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정부는 경기부양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삭감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여 금융비용을 낮춰줄 예정이다. 수출이 무너지니까 내수라도 살려야 하며 민간 부문이 해결을 못 하니까 정부가 나선다는 것이 부양조치의 근거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방치하면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부양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조치만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우그룹 부도의 후유증과 현대그룹의 부도 위기로 위기국면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여건이 악화되어 경제가 표류상태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취한 부양조치는 일시적인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부동자금이 넘치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돈을 풀고 이자를 낮추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사업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가이다. 돈이 풀리니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돈이 풀리면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 가격이 오른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저금리 정책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저금리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고금리 회사채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꿈으로써 금리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의 의지는 당연히 퇴색된다.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는 일본식 복합 불황에 빠질 수 있다. 1990년대초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가

주저앉자 일본정부는 70조엔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했고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여전히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은 불안하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못하고 경기 부양에 의존한 결과 일본 경제가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못하고 경기부양에 의존할 경우 자칫 일본식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 구조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제도와 효율적 보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평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경기부양 조치는 보완적 조치로서만 필요하다.

공정한 시장제도와 효율적인 보상체제 구축해야

그렇다면 표류하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절실하다. 경제주체들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의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는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다. 이런 견지에서 경제주체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침몰하는 경제를 구출하려면 부실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올바른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들 스스로 투자를 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해야 하며, 계열 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는 정당하게 이득을 얻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한편, 출자전환 · 유상증자 · 해외자본유치 등을 통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 및 이익 배분이 어렵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분리, 전문 경영제도 도입을 통하여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더할 나위 없다. 특히 기업이 개인이나 가족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회계 제도와 감사 제도를 개혁하여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도덕적 해이와 비리는 독버섯처럼 확산한다.

결국 구조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제도와 효율적인 보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평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여기서 세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불로 소득을 발굴하여 세원을 넓히고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소득격차를 줄이고 다시 모두가 희망을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부양조치는 수술을 하는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하듯이 보완적 조치로서 필요하다.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부양조치는 경기붕괴 → 부양 → 거품회복 → 경기붕괴의 악순환을 유발하여 남미형 경제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구조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계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기준을 바꾸는 등 완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기준 자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할 경우 재벌규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구조개혁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물론 잘못된 개혁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과 후퇴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IMF 위기를 맞아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정부불신이 커졌다. 현 상황에서 정부를 믿지 않고 사회분열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

우리 경제는 IMF 고통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다시 어려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다시 IMF 정신으로 돌아가 정부 · 기업 ·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다시 금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으는 데 전념해야 한다.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국내진출 외국기업보다 외국진출 한국기업이 한국경제에 더 많이 기여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외국기업 또는 외국자본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IMF 경제위기 전에는 오히려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현상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 모두 자국으로 가져갈 것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영국 ·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수상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이 세제 혜택 등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자국국민의 고용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는 선진기술과 선진경영기법 등이 함께 전수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부족한 외화를 확충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긍정적 측면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기도 했다.

사실 외국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이란 외국의 것이든 우리의 것이든 냉정한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효율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철수한다. 이 점에서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자본의 국적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그 자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확충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총력전을 펼친 결과, 1998~2000년간 401억달러(지난 36년간 246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GDP 대비 외국인 투자유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우리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재정경제부 · KDI 경제정보센터刊, 2001. 3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 채무의 미래 상환가능성을 의미하는 해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해외신인도가 의심받게 되면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 과제

1997년, 경기 하강기에 실시한 무리한 팽창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대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정부의 정책적 실기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대외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우리의 대외 지불능력 또는 외채상환 능력의 부족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IMF 구제금융 신청을 전후하여 현실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급격한 자본이탈이 나타나면서부터였다.

자본이탈과 함께 1997년 8월 월평균 달러당 902원이던 환율이 11월에는 1,163원으로 상승하였고, IMF로부터 유동성 조절자금의 승인을 받고 실제로 자금이 인출된 상태에서도 계속 상승하여 1998년 1월중에는 한때 달러당 2천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자본수지 적자는 1997년 11월에 전월의 9억2,190만 달러에서 44억6,440만달러로 급증하였고, 12월에는 이보다 더욱 확대된 63억7,05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듬해 1월까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 상태가 지속되었다.

국내 경제도 구제금융 신청으로 소위 'IMF 시대'가 개막되면서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종합주가지수는 1997년 12월 12일 350.7까지 하락한 뒤 1998년 1월 잠시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4월부터 다시 하락하여 6월 16일에는 280까지 하락하였다. 시장금리는 1998년 1월 CP 금리가 38%, 1997년 12월 23일 회사채 수익률이 31.11%까지 치솟는 등 폭등하였다.

달러로 환산한 불변 GDP가 1998년 1년 사이에 무려 36.3%의 하락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1930년대 대공황기의 미국이 4년에 걸쳐 모두 29.7%의 불변 GNP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서도 IMF 구제금융은 단기적으로 대외 지불능력을 회복하고 자본이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구제금융 제공 이후에도 한동안 환율상승이 계속되었으나 적어도 1998년 2월부터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 속도가 둔화되었다.

또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촉발된 극심한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기도 하였다.

가계의 입장에서는 순자산의 급감으로 내수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비 수준이 GDP 하락률보다 빠른 −10% 이하로 위축되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1998년 2/4분기에 −46.5%에 이르는 등 총지출 수준이 급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완화되고 1998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14.2%인 403억6,500만달러를 기록하였고 환율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조절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곧 해외여건 악화와 금융경색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8년 9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해외경제여건이 악화되었고, 막대한 부실여신을 보유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자 자금중개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 IMF 차입금 전액 조기상환은, 우리의 대외신인도 회복을 앞당기고 이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과 경제운용의 독자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IMF 차입금 전액 조기상환은 대외 신인도 회복에 기여

대외신인도 붕괴로부터 비롯되어 전개된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가 해외 충격에 얼마나 민감하며, 대외신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내외적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경제의 자동조절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금융시장을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8월 23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최종 잔액을 3년 8개월 만에 조기에 전액 상환하였다는 사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방경제국가로서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앞당기고 나아가 이를 더욱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해외의 신용평가기관들은 각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객관화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매겨진 국가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는 1999년 이후, 확대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효과, 경제의 역동성에 힘입어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2/4분기부터 2000년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0%를 초과하였고, 1999년의 10.7%에 이어 2000년에는 8.8%의 높은 성장을 실현하였다. 경상수지도 1998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외채 상환능력도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또한 S&P의 경우, 1997년 10월 24일 투자적격인 A+에서 1997년 12월 23일 투자부적격인 B+로 하락하였다가 1999년 이후 BBB-에 이어 BBB 등급의 수준으로 투자적격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제지표가 성장궤도로 복귀하고 경제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반면, 이미 우리나라의 해외차입여건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에 힘입어 신흥금융시장의 금융불안,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또 외평채 가산 금리의 하락세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금리도 동반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손상된 신용을 회복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차입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IMF 차입금의 조기 전액상환은 대외신인도를 추가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신인도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수지 적자라 하더라도 관리 가능한 적자 수준이나 객관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환 능력 등에 의해 유지되고 뒷받침될 수 있다. IMF 조기졸업은 대외신인도의 또 다른 척도인 외채상환 능력의 정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997년말 우리나라는 순외채가 541억달러인 순채무국이었으나 2000년에는 306억달러, 2001년 6월에는 348억달러의 순채권국으로 바뀌었다. GDP 대비 총외채 비율도 1999년 33.5%에서 2001년 6월말 현재 27.3%로 하락하여 채무부담 영역에서 안정영역으로 진입하였다.

경제운영의 독자성 회복하고 자본시장 개방의지 천명

IMF 차입금 전액 조기상환의 두번째 의미는 경제 운용의 독자성을 회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IMF 위기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와 같은 구조조정이나마 과연 우리 스스로 수행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으며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보다도 외환 및 경제위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우리의 위기조절 능력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했으며 희생의 정도는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맞아 IMF 지원을 받았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외환위기가 대외 신뢰도 하락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MF가 지나친 극약처방으로 인해 1998년 한해 동안 한국경제를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만큼 과도하게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나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과거와 다르게 우리 국민의 위기 민감도와 대응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가능해짐으로써 값비싼 희생이 전제되는 타율적인 개혁은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독자성의 조속한 회복은 자신감 및 경제주권의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도 경제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강화시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밖에도 IMF 차입금 조기 전액상환을 계기로 우리는 해외시장 변동의 영향력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내경제의 기초여건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IMF 자금 도입 이후

단계적인 자본시장 개방조치로 외환시장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1999년 이후 국내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국가신용등급의 지속적인 상향조정,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등 거시적 요인과 더불어 외국자본의 국내 유출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의 이면에는 자본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국내경제에 대한 외부충격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여러 경제 모형의 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외부충격의 영향력은 자본자유화와 함께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이동성과 외부충격의 영향력간에는 밀접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가 국경간 자본이동성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경제에 대한 외부충격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GDP 대비 거래비중이 선진시장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자본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외환시장의 심각한 불안정 요인은 오히려 국내 여건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비일관성인 경우가 많다.

결국, IMF 자금 조기상환을 계기로 우리는 경상거래 위주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외 충격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내경제의 기초여건 강화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질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정부와 민간 모두 정부의 단기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정부는 물가 안정과 시장이 경제충격의 부작용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과 외국인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시장 스스로 개혁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과제

이상과 같은 IMF 차입금 조기 전액 상환의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계경제적 불안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경제의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기만 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민간 모두 정부의 단기적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커지는 개방경제하에서 섣부른 정부의 개입은 제3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경제주체의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활동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산업구조 합리화 등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충격의 부작용을 시장이 스스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정부 조직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자체의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경기의 급속한 위축과 회복 그리고 누적된 부실에 따른 여파와 해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복하면서도 정부 주도와 민간의 협조하에 기업 · 금융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의 부실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그간 시장의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의성으로 인해 저항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정교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법률 부문에서의 서비스 강화가 요망된다. 또한 정부는 교통경찰관과 같은 감시자의 역할을 맡고 시장 스스로에 의해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경제는 외국인 장기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3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중 최종잔여분을 갚는 상환서에 서명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수요자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식경제로의 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주요 민간 기업들의 고용관행이 우선 변해야 할 것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탐색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역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교육정책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거나 또는 국제 정치적 영향력이 크거나 하여 외환위기시 장기적으로 해외 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쉽게 검토해 볼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는 지난 외환위기 때 냉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입지가 오히려 위기시 국민적 결집력을 높이고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혁주체가 지나친 힘을 보유하고 또한 개혁이 자의적이며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개혁 피로증과 저항이 발생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장' 조성과 작동시스템 구축을



김석중
전경련 상무, 경제조사본부장
(sjk@fki.or.kr)

1997년 12월 5일부터 1999년 5월 20일까지 1년 반 동안 총 10차에 걸쳐 우리나라가 IMF부터 차입한 19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난 8월 23일 모두 갚았다. 따라서 2001년 8월 23일은 우리나라 경제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경제독립일이라고 할 수 있다.

IMF 차입금 전액상환은 외환위기 완전 극복을 의미

IMF 차입금은 당초 2004년 5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대외지급능력이 급속도로 향상됨에 따라 거의 3년을 앞당겨 조기 상환한 것이다. 이 모두 국민 · 정부 · 기업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 하겠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우리와 거의 동시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시아의 여타 국가들이 아직도 IMF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환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우월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 태국 · 필리핀 등이 아직도 IMF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IMF 차입금의 조기상환 완료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대외에 공식적으로 외환위기의 극복을 증명한 것이고 그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극심한 혼란과 경기침체 후 1999년의 경기 급반등으로 2000년초에 우리는 '다시는 외환위기는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고 간접적으로 외환위기의 극복을 선언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식적이면서 완전무결한 위기극복은 이번과 같은 차입금 완전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이다.

그동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중에서는 또는 언론에서는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외환위기의 종료를 주장

할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빚쟁이 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회복해도 될 듯하다. 그에 맞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는 대외신인도 회복이 뒤따라야 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당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 IMF 차입금 전액상환은, 대외에 공식적으로 외환위기의 극복을 증명한 것으로 그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회복과 함께 IMF에 의한 정책 간섭 또는 협의가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외환위기를 겪게 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IMF에 의한 정책 간섭 또는 협의가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로부터 차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온다는 의미보다는 차입과 함께 IMF의 경제관련 각종 정책의 간섭 및 협의가 수반되는 행위인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요구한 정책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 및 환경 그리고 역사를 무시한 정책도 많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지만, 반면 그동안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없었던 많은 고질병을 IMF 이름을 빌려 시행할 수 있었던 면도 많았다.

초기에 시행했던 고금리 정책,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고부채 경제성장 역사를 무시한 채 급진적으로 추진한 부채비율 축소 정책, 동양의 지연주의 · 혈연주의 환경과 역사를 무시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 정책 등은 대표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들의 예이고, 큰 틀의 기업개혁 · 금융개혁을 통한 한계기업들의 퇴출과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을 내실과 수익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킨 것은 IMF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선진경제와 경제발전의 기본 요건인 노동 유연성을 위한 노동개혁을 이번 위기를 통해 시도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외환위기가 와도 안 되겠지만 노동개혁과 같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저항을 수반하는 개혁은 외환 위기와 같은 기회 이외에는 사실상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IMF 정책협의의 과실은 좀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이제 조기상환에 따라 IMF로부터의 정책 간섭이나 협의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단순히 IMF 정책협의의 종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오류에 대한 비난도 이제는 IMF에 돌릴 수 없게 됐다. 자율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반면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는 소홀

여기서 우리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구제금융을 갚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깨우쳐야 하고 무엇을 얻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시적인 부도에 몰려 천신만고 끝에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시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왜 그런 위기가 왔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대처 방법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고 고쳐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며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가경영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왜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동일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제점이다. 사실은 위기의 원인보다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치유책이 중요했으나 우리는 원인과 원인제공자의 색출에 치중했고 재발 방지 치유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했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은 채 임기응변식의 국지적인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보낸 꼴이 됐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의 원인을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차입과 방만한 경영, 족벌체제에 의한 경영,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몰았다. 어찌 그토록 잘못된 경영이 1960년대의 가난에서 불과 40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한국을 만들었을까? 어찌 그토록 잘못된 경영을 정부는 법과 제도로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았을까? 어찌 그토록 과다한 부채를 얻어 쓰도록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책임이 없을까? 어찌 그토록 불투명한 경영이 횡행하도록 회계제도와 감독체계는 방치한 것일까? 어찌 소비자들은 그토록 못된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그런 기업에 취업하고 얻은 소득으로 방만하게 해외여행에 열을 올렸던 것일까? 어찌 그토록 형편없는 우리 기업과 경제환경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은 없었을까? 어찌 그토록 왜곡되고 문제 많은 우리 경제를 꼬집고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는 없었을까?

결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원인제공자를 색출하자면 모든 국민 · 정부 · 기업 · 금융기관 · 정치인 · 학자 · 언론 등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누가 원인제공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경제, 우리 기업, 우리 금융기관, 우리 국회, 우리 정부의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을까가 중요한 것이다. 즉, 시스템의 왜곡과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스템 왜곡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책의 발견과 실행인 것이다.

문제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시장'이 없었다는 점, 정부가 시장조정변수인 가격 · 공급 · 수요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점, 각종 비효율과 불투명 그리고 왜곡이 시장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오토매틱 자율균형이 아닌 정부에 의한 매뉴얼 시스템에 의해 작동됐었다는 점이다.

'시장' 조성하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다시는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경제에 시장을 조성하는 것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 관리자 · 감독자 · 정비사 역할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4년이 다 지나고 IMF 차입금을 완전히 상환한 이 시점에서는 경제의 각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회계가 불투명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 차입도 안되고 물건도 안 팔리며 주가도 하락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투명한 회계와 지배구조를 추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지거나 합병되거나 매각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굳이 강제로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창업이 늘고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자율 · 책임경영을 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며, 금융기관도 경쟁력이 없고 부실하면 시

장에서 퇴출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금융기능은 정상화되어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경제 곳곳에 피가 공급되는 정상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정부가 특정기업에 자금지원과 출자전환을 강요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스스로 수익성에 근거하여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해마다 노사문제로 근로자가 파업하고 격렬하게 투쟁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유연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근로자 각자가 능력에 맞는 보수와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간의 위화감도 없고 노동 생산성은 향상되는 모습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민영화되어 사기업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효율성에서 사기업 못지 않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어야 한다.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채권자와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등살에 못 이겨 수정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금쯤은 국민 · 소비자 · 기업의 등살에 못 이겨 효율성 있는 정부, 서비스가 확 달라진 정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 비록 완성은 못했더라도 그런 방향이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기업은 타율 · 강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규제의 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남아 있다. 금융기관 스스로의 판단에만 맡기면 경제에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아직도 노동 부문은 경직되어 있고 공공 부문은 높은 철옹성을 쌓아 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크고 권위적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외환위기의 원인을 우리 경제의 시스템 왜곡에서 찾아야 한다. 똑같은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에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의 관리자 · 감독자 · 정비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개혁의 순서와 핵심을 연구하지 않은 결과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어떤 개혁을 어떤 순서에 의해 그리고 어떤 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기업 · 금융 · 공공 · 노동 개혁만 하고 정치 · 행정 · 언론 · 교육 개혁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공공개혁의 핵심은 민영화인지 효율성 제고인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 유연성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인지, 기업개혁과 금융개혁의 핵심은 부실정리인지 경쟁력 제고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개혁이 노동개혁보다 앞서야 하는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제대로 된 시스템 개혁을 했었다면 지금쯤 우리도 선진국 시스템이 갖춰져서 조종사가 수동으로 조종하지 않아도 비행기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목적지를 향해 운항하는 자동항법장치에 의해 우리 경제가 순항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과제는 명확하다. 부품교체만 하지 말고 자동항법장치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훼손된 신뢰의 회복이 급선무



유홍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yhjcti@hanmail.net)

우리 사회는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IMF 위기는 경제 부문에서 시작되었지만, 특히 그 초반 2년은 개인과 가족,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에도 혹독한 시련기였다.

계층간 불평등 심화되고 가족해체와 일탈 등 나타나

경제적으로는 IMF의 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고금리 · 긴축정책을 편 결과, 외환위기 발생 후 1년간 2만5천여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30대 재벌그룹 중에서도 10여개가 퇴출당하거나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디플레가 일어났고, 민간소비와 투자위축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업자가 급증했다.

한편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소득과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같은 소득격차의 확대는 계급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 틈을 탄 일부 신흥 상류층의 대두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키면서 사회통합의 저해 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러던 한국경제는 지난 8월 23일 차입금 전액을 조기상환함으로써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게 되었다. 경제위기 초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한 전국민의 위기극복 응집력은 전세계를 감동시켰고, 이제 천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쌓음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는 찬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고, 계층간 불평등 심화, 가족의 해체 · 일탈 및 사회병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일상 사회생활에서나 경제활동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는 신뢰를 통해 가능해진다. 신뢰는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파괴되기는 쉽고, 한번 파괴된 신뢰를 재구축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불신을 일단 경험한 사람들에게 신뢰의 위험부담은 너무 크기 때문에, 불신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불신의 구조는 사회 구성원간이나 사회제도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위

기상황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사회구조적 균열을 야기한다. 또한 불신은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 지연 · 학연 등 연줄망에 집착토록 하며, 소집단적이고 배타적인 사회구조적 방어기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경제사회학자인 그라노베터(Granovetter)는 사람들의 경제행위가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꽤 사려 깊은 경제행위를 하지만, 위기적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인 동기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경제 ·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경제위기는 경제적 거래에서 신뢰를 저하시켜, 거래 관계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증폭시켰으며, 경제활동 영역에서 신뢰의 감소는 삶의 질을 저하시켰고, 가족 영역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사회적 관계 구조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IMF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하고,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일부 신흥 상류층의 대두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켰다. 또한 구성원 상호간 신뢰가 훼손됨으로써 경제 · 사회적 관계와 일상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사회구성원간 신뢰 훼손이 경제 · 사회적 악영향 불러

경제위기와 불황은 국민들의 물질적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체계에도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다. 더부살이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들이 무너지고, 모듬살이의 법칙들이 적나라한 먹고살기의 논리에 밀려 원시적 야만의 징후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 사태는 가계부도로 이어지면서 일반 가정에까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실업 가장에 의한 가족 집단자살 사건이 빈발하였고, 가정의 물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혼과 성인의 가출 등 가족 해체 조짐이 확산되었다. 체질이 허약한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듯이, 신뢰와 사랑의 뿌리가 약한 가정들이 붕괴된 것이다.

실직과 경제난에 따라 이혼율이 급증했다. 가정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1998년 9월까지 협의이혼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5%가 증가한 9만5천건에 이른다. 특히 외환위기 발생 1년간 하루 평균 3,4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실직자 5명 가운데 1명 꼴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해체를 촉발하고 가족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주요인인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부인과 자녀에 대한 가장의 화풀이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노부모를 구타하는 패륜행위도 증가하였다.

개인신용불량자가 매일 1만명씩 양산되는 가운데, 보육원과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있으면서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이들과 떨어지는 IMF형 이산가족도 다수였다. 또한 부모의 가출로 인한 소년소녀 가장이 늘어나고 결식아동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무료급식이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대량실업과 가계부도로 가정

이 해체되면서, 1997년말경 전국에 1천명 가량이던 노숙자가 1998년말에는 서울시에만 3천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과 가족 노숙자도 등장했다. 시내 노숙자의 60%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실직하거나 일용직업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며, 노숙자의 43%에 달하는 기혼자의 대부분이 이혼 혹은 별거로 가족해체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다. 부분적인 경기회복과 노숙자 쉼터 설치 이후 그 수가 줄기는 했지만, 노숙자들은 직업활동의 실패와 그에 따른 가정생활의 파탄이 상호작용해서 삶의 존재기반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삶에 대한 미래전망을 상실한 특징을 갖는다. 실직 가장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고, 가정주부들이 윤락행위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의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우리 사회를 그나마 지켜주던 가족간의 믿음이라는 신뢰관계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단절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징표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가족해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직이나 경제난 자체보다 가족간의 신뢰와 유대감 상실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가정의 해체는 사회의 위기를 초래한다. 家長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 가정의 특성상 가장이 무너진 가정은 연쇄부도를 겪게 되는데, 가족 중 가장 약한 부분인 어린이와 노인이 먼저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이 해체되면 경제사정이 나아져도 재결합이 힘들고 해체가정의 구성원들은 탈선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IMF 경제위기는 사회병리적 범죄도 증폭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1년 동안 5대 범죄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가운데, 강도와 절도는 약 30% 가량 증가하였다. 생계위협에 내몰린 극빈 계층의 자포자기형 · 반인륜적 범죄도 늘어났다. IMF사태 이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어나더니, 보험금을 노리고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등 자식을 희생시키는 범죄까지 저질러진 바 있다.

이처럼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생계위협 및 정신적 공황과 더불어 한국의 빗나간 가족주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소외계층의 생계에 대한 절박감이 극단적인 도덕성 파괴로 표출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라도 가족전체를 구해야 한다는 한국적 가족주의의 그릇된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시민결사체 통한 아래로부터의 신뢰회복 필요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물론 경제활동 영역이다. 개인적인 경제활동에서 보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들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의 위기를 맞았고 이러한 변화는 기업문화와 직장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빠르게 붕괴되었다.

1998년의 한 조사를 보면, IMF 체제 이후 직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응답이 88%인데,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48%, 침체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업내 상호작용 관계의 구조가 경쟁심화와 고용불안정에 따른 동기저하의 부정적 측면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누구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직장의 분위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었다. 동료가 아니면 자신이 나

가야 되는 냉엄한 현실이 동료애나 상사와 부하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정리해고가 단행되면서 퇴직한 사람들이 배신감과 분노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한편, '살아남은' 직장인들도 '생존자 증후군'의 죄의식과 불안감 등에 시달렸고,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판정 건수가 경제위기 2년간 두 배로 늘어났다.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전국규모 조사 응답자의 69%는 돈벌이 ·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일에 대한 '수단적 지향성'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경제적 위기상황은 경제사회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일상과는 다른 부정행위를 증가시켰다.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도 증가했고 근로자들의 대응도 거칠어진 추세이다. 또한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기밀을 빼내 경쟁회사를 차리거나,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신뢰붕괴의 조짐이 확대되기도 했다.

경제위기는 개인과 집단간 사회적 관계에서도 신뢰를 급속하게 붕괴시켰다. 이러한 양상은 '6 · 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외환위기의 여파가 계층간에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구호가 서민층에게 '고통전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일부 상류층은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서 부를 더욱 축적한 결과를 낳으면서 계층간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한국 사회공동체 작동원리의 正合性과 효율성의 위기이다. 이것이 환란을 통해 경제위기로 드러나고 사회 각 부문의 신뢰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IMF 위기가 비단 경제위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동체를 떠받치는 도덕적 결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사회성과 공동성의 위기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뢰의 재구축과 사회적 협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리력에 의해 강제하기는 어렵다.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결사체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신뢰형성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개방된 결사체를 형성하고 참여함으로써 모르는 타인과 행동을 함께 하면서 상호신뢰를 배울 수 있다. 상호신뢰가 습관화되면 밀도 높은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것이 일반적인 호혜적 규범을 확산시키고 조정과 의사소통을 증대시켜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능력도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기득권층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노블리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시민결사체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호혜적 규범을 확산시키고 조정과 의사소통을 증대시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능력도 고양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득권층이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



김준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wkim@ccs.sogang.ac.kr)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17세기초 그의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햄릿」에서 폴로니우스(Polonius)의 입을 빌어 "… 채권자도 채무자도 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를 함께 잃게 되고, 돈을 빌려쓰면 결국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라는 유명한 충고를 남기고 있다.

물론 이 충고는 금융행위의 이점을 간과하고 있지만, 부채가 지닌 무시무시한 어감을 잘 전달하고 있다.

경제주권 회복하고 대외신인도도 제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IMF로부터 우리가 빌린 돈은 총 195억달러로, 이는 오래전에 유명세를 탔던 미국 한 드라마의 주인공인 '600만불의 사나이'를 3,300여명이나 꾸어온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그러나 이 엄청난 돈을 빌린 지 3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01년 8월 우리나라는 IMF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채무국의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채무상환은 2004년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상환기한을 무려 3년이나 앞당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IMF 체제의 조기졸업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정책 및 구조조정안 등의 수립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IMF 차입금 조기상환의 의미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도 지난해 8월 2005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IMF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국채 가산금리가 3.9%에서 3.1%로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본 바 있다.

미국의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F 당국자들은 한국의 IMF 체제 조기졸업을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확신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IMF 조기졸업은 우리의 자신감 회복과 구조개혁정책의 적합성을 의미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주권의 회복이라는 상징과 국가신인도의 상승이라는 실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IMF 조기졸업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당은 증가추세에 있는 중산층의 가계 빚과 여전히 높은 단기외채의 비중 그리고 몇 단계 상승했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여전히 투자적격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IMF 조기졸업의 의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 IMF체제의 조기졸업으로 경제 주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물론 극단적 비관론도 경계해야 한다.

지나친 낙관론이나 극단적 비관론 모두 경계해야

IMF 조기졸업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최근 보도되고 있는 주요 해외언론들의 평가 또한 상반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더 타임즈』 등은 한국의 IMF 졸업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극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개혁노력과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극찬하고 있다. 반면,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개혁을 위한 다방면의 목표를 추구한 까닭에 한국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2002년 단체장 및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향후 개혁의지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엇갈려 보이는 이러한 두 가지 평가는 사실 우리 경제의 두 얼굴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때, 한국의 위기극복 과정은 『더 타임즈』의 찬사처럼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지적 또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IMF 체제 조기졸업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지나친 낙관론은 물론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 또한 경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포스트 IMF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평범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4년전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양극단으로 쏠리지 않는 객관적이면서도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다.

1997년말 우리 국민 모두를 엄청난 충격의 회오리에 빠뜨린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사회전체의 각 분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역시 금융시스템을 통한 정경

유착에 있었다. 꽤 오랜 동안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던 것이 세계화의 창틀을 넘어 세상 밖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자, 외국의 언론들은 우리 경제의 정경유착 내지는 관치금융을 빗대어 '친구끼리의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꼬집기 시작하였다.

우리 경제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외국투자가들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우울하다는 진단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전망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국내통화는 큰 폭으로 절하되고 주식을 비롯한 여러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불행하게도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자산가치의 급락으로 은행대출용 담보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부도율이 높아지자,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제투자가들의 신뢰가 또다시 낮아졌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적신호가 뒤를 이었음은 물론이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그동안 우리는 중·장기적인 개혁 및 구조조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30대 재벌 중 14개가 쓰러지고 수많은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기업과 금융부문에서의 낡은 관행이 상당부분 고쳐졌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과 새롭게 태어난 기업들이 필사의 노력으로 현저하게 건실해지는 등 사실 큰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공정한 시각에서 판단할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정상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엔 미흡 진정한 시장원리 정착돼야

사실 우리 경제가 IMF 체제를 조기에 졸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으로 행운에 가까울 정도의 외부충격을 꼽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IMF 조기졸업의 일등공신은 역시 수출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부터 불어온 인터넷혁명과 정보산업(IT)의 열풍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IT산업 호황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지적한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치료하고자 그동안 우리가 힘들여 쌓아온 노력에 의해 한국경제가 IMF 조기졸업을 달성하게 된 몫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촉발원인이었던 단기외채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7년말 단기외채는 외환보유고의 7배가 넘었으나, 2001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의 비율은 44% 정도이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도 40%대에서 32%로 감소하였다.

외환보유고 역시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990억달러에 육박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오히려 외환보유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과의 정치·외교관계 등 경제 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4년 전에 외환위기를 직접적으로 발생시켰던 촉발원인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의 해소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외부경제의 상황변화에 상대적

으로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경제체질을 진정한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위기 이후 안정적인 호황으로 전환되는 북유럽의 성공사례를 따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및 수출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절한 서비스와 정책당국의 유연하고도 엄격한 감독기능이 뒤따라야 한다.

세밀한 전술과 기술의 부족을 드러내곤 하는 한국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한국경제의 어두운 측면을 떠올리곤 한다.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이 한국축구와 경제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은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전제로 한다. 경제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독하여야 할 경제당국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대응 또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동지와 적도 구별 못하는 정치혼란 및 소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정력으로 얼룩져 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변별력을 잃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우리 경제의 지지부진한 개혁 내지는 구조조정과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경제 구조조정의 본질은 결국 변별력 제고에 있다. 어떤 기업이 회생 가능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객관적인 잣대로 가늠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수용할 자세도 갖추지 못한 듯하다. 최근 갈팡질팡하고 있는 몇몇 기업의 처리과정과 노동계의 구조조정 저지 움직임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변별력 높고 공정한 구조조정을

위기 이후의 경제는 크게 남미형과 일본형 그리고 북유럽형으로 나누어진다. 남미형은 커다란 규모의 침체와 회복이 교차하는 꼴이고, 일본형은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형태이다. 반면, 북유럽형은 침체가 극복되어 안정적인 호황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북유럽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북유럽의 성공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한 마디로 개혁 및 구조조정의 성공이다.

현실에서 경제발전의 대부분은 끊임없는 발명 및 혁신과정을 거친 보다 향상된 생산방법과 상품이 기존의 그것을 대체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주체는 물론 기업이다.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및 수출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적절한 서비스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유연하면서도 엄격한 감독기능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개혁과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또다시 절감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변별력 높고 공정한 기준하에 옥석을 가리는 데 온갖 지혜를 짜내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와 평등의식으로 구조조정이 더뎌지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경의 격변기에 우리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회생을 꾀하기 위

해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한다.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려면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제도전환이 절실하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각 분야에서 사활을 걸 만큼 결연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IMF 체제 조기졸업으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야 하겠다. 모든 일의 성공여부는 결국 기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금융기관의 합리성 그리고 정책당국의 사명감이 입체적인 조화를 이뤄 반드시 한국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과 구조조정은 원칙과 본분에 충실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개방화로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농업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이처럼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지나친 농업보호 정책으로 인해 생산과 무역이 왜곡되면서 농업 보호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지원은 줄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국내 농업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도 국제화 · 개방화되는 추세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개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수입제한이 없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설정하려고 노력하였고, 우리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쌀영농에 대한 지원정책도 대부분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것임을 주장하여 감축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인 부채 탕감 · 경감 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 시행하여 총 17조5,500억원 규모의 농가부채를 경감하였고,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42조 투융자계획, 15조 농특세 등을 활용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개방의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시에 농업인들도 농산물을 우리 입맛에 맞게 고급화하고 지식영농 및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여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국제화 · 개방화라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출처 : 「우리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재정경제부 · KDI 경제정보센터刊, 2001.3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 주력



박재식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도입한 총 195억달러의 차입금 중에서 최종 잔여분인 1억4천만달러를 2001년 8월 23일자로 조기 상환함으로써 IMF로부터 도입한 차입금을 당초 계획(2004년 5월)보다 2년 9개월여 앞당겨 조기에 전액 상환 완료하게 되었다.

IMF 차입금 전액 조기상환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도입한 자금은 대기성차관(필자 주 : Stand-By Loan,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맹국에 쿼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융자해 주는 제도)이 60억달러, 보완준비금융(필자 주 :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IMF가 1997년 12월 새로 도입한 신용제도로서, 한국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지원규모에 제한이 없고 대기성 차관보다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임)이 135억달러였다.

그 중 만기가 짧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완준비금융 자금은 이미 1999년 9월에 예정(2000년 6월)보다 9개월 앞당겨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대기성 차관도 올 1월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8월 23일 조기상환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IMF차입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 상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1997.12.18) 한때 39억달러까지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8년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늘어나 8월 22일 현재 약 990억달러로 세계 제5위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단기외채도 올해 6월말 현재 411억달러로 외환위기 이전(1997년 7월말, 981억5천만달러)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3.6%로 안정수준(6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대내외에 알려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

다. 또한 IMF자금은 그 성격상 일시적인 대외지급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지원 자금인바,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이미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인식하여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조기상환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있었다.

> 우리나라는 8월 23일 IMF 차입금을 전액 조기 상환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였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었으며, IMF와의 정책협의 의무도 종료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신용등급도 투자적격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외환위기 실질적으로 극복

IMF자금의 조기상환은 단순히 당초의 일정을 앞당겨 상환하였다는 것보다는 이로 인해 한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였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IMF 차입금을 완전 상환하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9월부터 IMF 수혜국에서 재원 공여국(creditor country)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제고되어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IMF의 쾰러 총재도 8월 21일 대통령께 보낸 축하서한을 통해 이번 우리나라의 조기상환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안정을 찾았으며, 한국의 금융부문이 강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IMF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앞으로 IMF와의 관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1997년 12월 4일 IMF와의 대기성차관 협약 체결에 따라 3년간의 프로그램 기간중 IMF와 11차례에 걸쳐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협의를 실시한 바 있다. 정책협의를 통해 IMF와 합의한 정책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인출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IMF 프로그램 기간중 우리나라는 IMF 정책권고의 구속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0년 12월 3일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협의 의무는 종료되었고, 향후 우리나라는 IMF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나 1년에 한번씩 갖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만 받으면 되게 되었다. 연례협의는 구속성이 없는 통상적인 협의이며, 올해 연례협의는 11월초로 예정되어 있다.

〈표 1〉 외환보유액 · 외채 및 환율 추이

(단위 : 억달러, 원)

	외환위기 당시	1998.6	1998.12	1999.12	2000.12	2001.8.22
외환보유액	39.4	370.4	485.1	740.5	962.0	990
외채	1,807	1,552	1,487	1,371	1,363	1,270*
원/달러 환율	1,965.0	1,373.0	1,204.0	1,138.0	1,264.5	1,282.7

주 : * 2001년 6월말

외환시장 안정되고 경제 회복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의 강화와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동시에 조속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 금융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왔다. 위기 초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었으며, 거시경제 정책도 1998년 2/4분기부터 확장기조로 적절히 전환되어 경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우선 대외부문이 강화되어 외환보유액이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서 8월 22일 현재 세계 제5위 수준인 990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한때 1,807억달러에 이르렀던 외채도 올 6월말 현재 1,270억달러로 감소하였다. 또한 1999년 9월부터는 대외채무보다 대외채권이 많아져 순채권국으로 전환(2001년 6월말 현재 대외순채권 348억달러)되었으며,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나 1997년에는 연간 70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157억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기당시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도 빠르게 개선되어 1999년초에는 투자적격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한편,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경제전반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시정되었으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주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올 2월말까지 금융 · 기업 · 공공 · 노동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법적 · 제도적 기본틀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였다.

〈표 2〉 주요국의 IMF 차입금 잔액(2001년 6월말)

(단위 : 백만SDR)

	기 간	총차입액	상환액	현재 잔액
인도네시아	1997. 11 이후	8,318.0	550.4	7,767.6 (9,678.4)
태 국	1997. 8 이후	2,500.0	625.0	1,875.0 (2,336.3)
필리핀	1994. 6 이후	2,357.6	18.2	2,339.4 (2,914.9)
아르헨티나	1984. 12 이후	17,611.0	5,978.0	11,633.0 (14,494.7)
브라질	1998. 12 이후	9,470.8	6,512.4	2,958.4 (3,686.2)

주 : 괄호 안은 2001년 6월말 환율(1SDR=1.246USD)로 환산한 미달러화금액
자료 : IMF

〈표 3〉 우리나라 신용등급 추이

Fitch	BB+ (98년말)	⇒ BBB− (99.1.19)	⇒ BBB (99.6.24)	⇒ BBB+ (00.3.30)
Moody's	Ba1 (98년말)	⇒ Baa3 (99.2.14)	⇒ Baa2 (99.12.16, 전망 Stable)	
S&P	BB+ (98년말)	⇒ BBB− (99.1.25)	⇒ BBB (99.11.11, 전망 Positive)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체질강화에 주력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소비 · 건설 등 내수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 산업생산 ·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지표는 부진을 지속하여 본격

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과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대 금융그룹, 대우자동차 매각의 지연 등으로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대립적인 노사관행의 잔존으로 투자가 저해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경제현안 해결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조화롭게 병행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체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은 정책변수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재정정책은 재정의 경기대응기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며, 통화신용정책은 국내의 여건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조화롭게 병행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체질 강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정책은 해외여건 변화에 의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변수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의 경기대응기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둘째,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의한 기업 · 금융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개별 기업 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시장심리의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식기반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IT · BT · NT · ET · 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표 4〉 외환위기 당시와 최근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외환위기 당시	최 근
외환보유액(억달러)	39(1997.12)	990(2001.8.22)
경상수지(억달러)	-82(1997연간)	110~130(2001년 전망)
총외채(억달러)	1,807(1997.6)	1,270(2001.6말)
순대외채권(억달러)	-654(1997.6)	348(2001.6말)
외국인투자(억달러)	70(1997연간)	157(2000연간)
환율(원/달러)	1,965(1997.12.24)	1,284(2001.8.21)
경제성장률(%)	-6.7(1998연간)	3.7(2001.1/4)
소비자물가(%)	7.5(1998연간)	5.0(2001.7, 동기비)
실업자(만명)	178(1999.2)	76(2001.7)
주가지수	280(1998.6)	568(2001.8.21)



기존 제조업과 신기술간의 접목,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중산 ·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 중산 · 서민층의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농어가 소득 안정기반 확충과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대외부문이 강화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IMF 졸업 이후에도 외환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 어떠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은 전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98년 1월 시민 · 종교 ·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총 351만여 명이 227t(22억달러)의 금을 모아 국가회생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한 바 있으며, 대량실업의 고통 속에서도 과격투쟁을 자제하고 노 · 사 · 정 합의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노사문화를 구축하게 하였다.

사실 우리가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와 같은 국민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 모두가 IMF 위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참고 1〉 우리나라의 IMF 자금 인출내역 및 차입조건

■ 인출 내역

(단위 : 억달러)

	일 시	보완준비금융	대기성차관
1차	1997.12월	–	55
2차	12월	35	–
3차	12월	20	–
4차	1998.1월	20	–
5차	2월	20	–
6차	5~6월	20	–
7차	8~9월	10	–
8차	12월	10	–
9차	1999.4월	–	2.5
10차	1999.5월	–	2.5
합 계		135	60

■ 자금별 차입조건

	보완준비금융	대기성차관
금리	IMF 신용수수료율* +3% (최초 인출 1년 경과후 매 6개월마다 0.5%씩 가산되어 최고 5%까지 추가)	IMF 신용수수료율
차입기간	인출후 1년 및 1년 6개월 경과시 2분의 1씩 분할상환	3년 거치후 2년간 8회 분할상환

주 : *상환기간중 4~5% 유지

〈참고 2〉 우리나라의 IMF 자금 상환실적

(단위 : 억SDR)

보완준비금융			대기성차관		
	당초 상환계획	실제 상환		당초 상환계획	실제 상환
1998.12월	20.5	20.5	2001.1월	–	7.6
1999.1월	7.5	7.5	2월	–	7.6
2월	7.5	7.5	3월	5.1	5.4
4월	–	9.3	4월	–	4.6
5월	4.7	9.3	5월	–	5.4
6월	22.8	8.9	6월	5.1	5.6
7월	7.5	11.9	7월	–	4.8
8월	8.8	11.9	8월	–	3.5
9월	2.4	12.8	9월	5.1	–
11월	4.7	–	12월	5.1	–
12월	6.0	–	2002년	21.4	–
2000.2월	1.3	–	2003년	1.8	–
3월	2.4	–	2004년	0.9	–
6월	3.6	–			
합 계	99.5	99.5	합 계	44.6	44.6

주 : IMF 자금의 지원과 상환은 SDR(특별인출권)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바, 미래의 달러/SDR 환율을 알 수 없어 당초 상환계획에 따를 경우의 상환금액을 달러화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SDR로 표시단위를 통일.
참고로, 2001년 8월 20일 현재 환율은 1SDR=1.28USD임.

이 달 의 초 점

전월세난 및 주택수급 불균형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부문은 공공에서 전담해야



하성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ha1234@wm.cau.ac.kr)

무주택 서민에게 집을 지어 주는 국제 봉사활동 행사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부부 등 국내외 자원봉사자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아산시 한 마을에서 열렸다. 해비타트(Habitat) 운동은 종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담겨 있어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민간 · 종교단체뿐 아니라 유엔 ·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비슷한 활동이 수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매년 엄청난 금액의 주거환경개선 및 저렴주택공급 자금을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으로 주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해비타트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적정한 주거를 보장하는 주거권을 천명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지난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해비타트회의는 각국의 시민단체(NGO)들도 참여하여 임차자의 주거안정, 비인간적 강제철거 방지, 노숙자 지원강화 등을 논의하고 '이스탄불 선언'을 채택하였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국제기구와 민간 · 종교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민 주거사정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고통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임대 및 소형평형 주택 품귀현상 속에 전세 및 매매 가격 상승

오늘날 한국의 주거상황은 어떤 특징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주택의 양적 측면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지역은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로 대변된다. 1980년대 이후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도시지역은 가구수에 비해 주택재

고가 부족하다. 특히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최근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 주택재고에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비중이 낮아 가난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는 데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국민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문제는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인당 주거면적,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가구당 사용방수 등의 지표는 향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주거수준은 열악하며 특히 비닐하우스, 쪽방, 달동네 · 산동네 등의 불량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주거수준이 모든 가구에 골고루 상향이동하지 못하고 주거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국민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주택가격 대 소득비(PIR)와 임대료 대 소득비(RIR)는 세계 52개국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소득의 감소로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주거부문 문제의 심각성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임대 및 소형평형 주택 품귀현상 속에 전세값의 상승은 물론 매매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주택정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난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상의 문제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연관이 깊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의 공급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수급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1998년 아파트 소형평수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분양가 규제제도를 철회하는 제도변화

현재 주거부문의 문제는, 임대 및 소형평형 주택 품귀현상 속에 전세 및 매매 가격상승과 정부의 주택정책 혼선으로 집약된다. 정확한 주택수요공급 진단, 공공주택 기능의 확대, 국민주택기금 운영의 내실화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및 금리인하 등이 겹쳐 전월세난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임차형태이다. 전세가 지닌 장점으로는 임차가구 입장에서 보면 월세 → 전세 → 자가로 상향이동하는 징검다리(stepping stone) 역할을 하며 목돈 주거비 저축이라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은행문턱이 높았던 우리나라 제도권 주택금융 시스템하에서 전세금은 자금활용면에서 안정적이며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관행적으로 이자를 계산한 것이다.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집주인은 주택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임차가구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매월 지불해야 할 현금지출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기인한다. 대도시 지역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은 2001년 6월 현재 40%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책정한 임대료에 대한 조정 및 규제방식은 없는 실정이며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나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장경제의 선두를 달리는 미국은 임대료 규제

를 오랜 세월 동안 채택해 왔으며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도 역시 임대료 규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주택정책의 틀 다시 짜야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소형평형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998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및 소형평형의무제를 폐지하고 시장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 · 철폐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로 나타날 신규 소형평형아파트 공급 축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민간이 공급을 꺼리는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부문을 공공에서 전담하여 수급불균형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중단되었고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요즘 정부는 소형아파트 공급의무비율규정 부활 방침과 아울러 민간개발 공공택지에 짓는 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을 전면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4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주택정책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22차례 각종 처방과 대책이 발표되었다. 비슷한 내용이 포장만 바꿔 발표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주택정책의 틀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 · 통계자료의 부정확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공식발표 물량 대비 실제 건설 물량을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한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통계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기준이지만 승인받은 아파트 상당수가 완공되지 않고 있어 정부발표에 근거한 주택 수요공급 진단은 정확하지 못하다.

둘째, 공공주택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각종 시장규제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 및 소형아파트 공급 확대가 어렵다고 한다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 8.15 경축일에 대통령은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향후 3년내 공급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기대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은 5년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단기적인 서민 주거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5년의 단기, 20~50년 장기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 서민주택 공급의 젖줄인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0년말 현재 39조원이 조성 ·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규모와 손실규모가 너무나 크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건설업자와 대출승인 대가로 돈을 챙긴 은행간부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상황하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끝으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서민주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다. 정부 ·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주민단체가 힘을 합하는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와 주민이 협력하는 협동조합주택 제도개발 및 시행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는 임대주택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책이 시급한 때이다.

이 달 의 초 점

전월세난 및 주택수급 불균형

'주택건설' 중심에서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을



윤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jhyoon@krihs.re.kr)

최근 주택시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전월세난 및 주택가격의 급등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예년(1999년 3.4%, 2000년 0.4%)보다 커지고 있어 올 8월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6.4%에 이르고 있다(〈표〉 참조).

서울지역 · 아파트 · 소형주택이 주택가격 상승 주도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지역(8.8%), 아파트(9.7%), 소형주택(8.7%)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연립주택 및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은 올 7월 현재 1.0~2.3% 수준에 머물러 지역시장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세가격은 연 5% 안팎의 꾸준한 상승을 보여 왔는데, 외환위기 직후의 폭락 이후에는 10%를 넘어서는 상승폭(1999년 16.8%, 2000년 11.1%)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역시 상승세가 계속되어 8월 현재까지 12.7%가 상승하였는데,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지역 · 아파트 · 소형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나 매매시장보다는 차별화 폭이 적게 나타남으로써 전세가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매물이 부족하여 주거이동을 제약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임대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으로는 월세전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던 것이 올해에는 본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8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매물 비중은 약 40% 수준에 이르며, 주택임대차 계약 중 전세가 약 56%, 보증부월세가 약 43%, 순수월세가 약 1%로 구성된다. 월세이율은 서울 및 신도시가 1.2% 안팎이며 전국적으로는 1.3% 수준으로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회복과 임대시장의 구조전환 과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주택 수급조절은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

전세입자의 자가전환 증대와 유동자금 유입이 원인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동반 상승 및 월세전환의 확대 등은 독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주택시장 내부의 상호관계, 거시경제 여건의 영향 등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연계현상이다.

먼저 주택가격의 상승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회복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시장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의 원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수요지원책의 확대로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입자의 자가전환이 증대된 점, 정책지원 및 월세전환 등으로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증대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최근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부동자금이 늘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불투명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축, 증시침체 때문에 대기성자금화하고 있으며, 또한 저축금리 하락으로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대체투자처로서 부동산, 특히 환금성과 현금유동성이 좋은 소형 아파트 투자가 크게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수요 증대에 반하여 외환위기 이후 감소된 주택건설도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라 하겠다.

한편 전세가격의 상승 및 월세전환의 증대는 임대시장의 구조전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형태가 존립하기 위한 여건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전세는 집주인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거주기능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빌려주는 사금융 기능의 두 가지 행위가 복합된 형태이다. '전세'가 효율적인 주거형태로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전세를 안고서라도 주택을 사려는 투자수요가 높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족자금을 제도권금융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제된다.

그러나 근래 들어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전세'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효율적인 주거형태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흔들리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94%를 넘어서면서 주택재고 부족 문제가 크게 완화됨으로써

〈표〉 주택매매 및 전세가 상승률(2001년 8월)

(단위 : 전년말 대비, %)

	종합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서울	광역시	중소	단독	연립	아파트	대	중	소
매매	6.4	8.8	6.2	4.2	1.9	4.8	9.7	3.7	5.1	8.7
전세	12.7	15.8	11.2	11.1	8.7	12.3	14.9	11.4	12.6	13.4

자료 : 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 동향 조사」, 2001.8.15

주택가격의 장기안정과 함께 주택투자수요가 감퇴하고 있으며, 금융개혁 이후 은행들은 위험도가 낮은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있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으로 주택자금대출의 유동성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와 같은 사금융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공급 유인이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집주인은 전세자금의 마땅한 운용처를 찾을 수 없어 전환이율이 높은 월세공급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입자는 현금지출이 있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함으로써 전세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형태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로 인하여 임대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조정과정에서 점차 월세전환이 증대하고 있다.

주택수급 조절은 시장에 맡기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적극 지원해야

주택가격의 지역적인 이상급등은 유동성 장세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시장차별화의 심화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거시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주택가격의 유동성장세는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나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가격 상승세는 약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의 증대, 월세에 대한 세입자 인식의 개선 및 부담능력 제고에 따라 월세시장으로의 전환은 꾸준히 진전될 것이다.

근래 들어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주택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거시경제의 변동과 주택정책 변동에 따른 움직임, 자본이득 중심의 영세 임대시장에서 소득수익 중심의 사업형 임대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막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안정대책이 수 차례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봄가을마다 되풀이되는 전월세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리자금 융자를 통한 전세금 대출 및 신규 분양주택 중심의 자가마련 지원, 임대사업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20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완공하려면 2~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또한 재정투입이 연평균 4,500억원 정도로서 예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여타 주택부문 투입액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이라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로 인해 자리잡기 시작한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주택수급조절이 작동되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자율기능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정책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 중심의 정책수행을 위한 기존의 제도를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수행을 위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현상적인 정책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달 의 초 점

전월세난 및 주택수급 불균형

임대주택 공급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skim@mail.lgeri.co.kr)

과거 주택경기는 실물경기 상승국면 이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의외의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활기는 저금리 · 재개발 · 월세전환 등에 기인

주택시장의 활기는 저금리현상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저금리기조에 따른 투자포트폴리오의 재편과정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리하락이 지속되자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즉,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과도기로 평가된다.

아직은 위기 이후 구조조정 진행과 대외여건 악화로 거시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 금융상품보다 기대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익성 부동산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월세전환을 계기로 주택임대 투자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과거 전세를 놓는 주택임대 투자수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이 장기 안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사라졌으나 금리하락이 지속되고 월세가 확산되면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위축에 따른 주택실수요의 부진을 보완해 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월세로 전환되면서 예금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이 나는데다 당분간 월세 전환,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기대가격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다 재개발 급증, 월세전환 등 일시적 수급불균형 요인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부추겼다.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강남은 물론 서울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은 일시에 수천가구가 멸실되는 것으로 이들 가구가 한정된 공간에서 동시에 전세수요나 구매수요로 나서고 있

어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대혼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재건축 규모가 워낙 크고 지역이 광범위한데도 사업승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시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충격이다. 당분간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구들의 주택수요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2, 3년 정도 그 충격은 지속될 것이다.

주택임대차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충격도 크다. 전세형태는 집값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든지 고리의 사채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임대차 관행이나, 주택가격이 중장기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저금리기조가 정착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투자를 계속할 동기가 사라졌다. 자연히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일단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에 전세물량은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반면 월세물량은 공급과잉으로 월세전환이자율이 사채이자율 수준에서 연 10% 내외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에는 한계 있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충격으로 신규 주택분양이 30만6천가구로 급격히 감소한 영향도 올 상반기중 가시화되었다. 신규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이 대략 2, 3년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택수급 측면에서의 외환위기 충격은 올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주택공급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60만호 정도로 연간 주택기본수요인 40여만호를 지속적으로 상회해 왔다.

최근 주택시장의 활기는 저금리현상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재개발 · 재건축 급증 및 월세전환 등 일시적 수급불균형 요인도 이를 부추겼다. 그러나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주택공급은 30만호에 그쳐 미분양 재고를 감안하더라도 기본수요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주택멸실 충격까지 겹쳐 최근 주택시장 불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신규분양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재고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 규모별로 보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소형주택 부족이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주택공급업체들은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중하위계층용 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이는 대신 구매력이 뒷받침된 중상위계층을 위한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늘려왔다.

그러면 유동성 효과만으로 아파트가격이 대세상승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아직은 국지적 현상으로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하면 여타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은 외환위기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거래의 동반이 없는 호가 위주의 불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유동성 측면을 제외하면 주택가격이 대세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주택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물경기가 회복돼 가계의 주택구매력이 살아나면서 실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국민임대주택 대량 공급, 소형의무건설제 부활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부작용이 큰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수요자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주택가격 수준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집이 소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지만 분당 · 일산 등 제1신도시 입주 이후 주택가격의 장기하락 충격에서 보았듯이 임대주택공급 및 제2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개발 · 재건축이 완료돼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면 지금과 반대현상 즉, 공급과잉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실물경기와 동떨어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이 거품인지 대세상승의 시작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추정결과 2001년 7월 현재 전도시의 아파트가격은 적정가격 수준에 비해 1.16배 정도, 서울시 아파트 실제가격은 적정가격보다 1.28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금리하락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또다른 방법으로는 가계소득에 대한 주택가격의 배율 즉, PIR(Price to Income Ratio) 배수의 국가별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

1990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도시의 PIR배수는 4.2배, 선진국 4.6배, 개도국 3.7배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 도시는 7.9배에 달했다. 또한 가구소득에 대한 주택임대료 배율(Rent to Income Ratio:RIR)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37.7%), 멕시코(36.4%)에 이어 35.2%로 임대료 비율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가계의 주택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절대수준이 워낙 높아 추가로 크게 상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소형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적정가격 수준을 넘어선 주택가격도 급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내경기는 미 · 일 · 유럽 등 전세계적인 동시 불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금리시대에서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여러 부동산 유형 가운데 월세 수입이 가능한 소형주택 · 상가 등 일부상품에 국한되어 있다.

더구나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은 금융상품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매매에는 각종 거래 관련 세금, 중개수수료, 유지 · 보수비용 등 매매가에서 10% 안팎을 차지하는 매몰비용이 소요되는 약점이 있다.

주택수급 측면을 보더라도 올 가을부터는 1998년 가을 이후 연평균 40만호 이상 풍부하게 공급된 물량의 입주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물량부족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주택시장은 조만간 안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시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는 재건축 사업부터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는 재건축사업부터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민간이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소형주택의무화를 시행하려면 재건축 사업도 시행되고 동시에 소형주택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형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비례적으로 높여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소형주택은 민간에서 주로 공급하는 구매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임대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민간기업의 사업성 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어렵다. 서민용 소형주택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 공급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시장실패 현상으로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소형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임대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달 의 초 점

전월세난 및 주택수급 불균형

전월세 부담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한만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 · 기업 · 노사관계 ·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노력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왔으며, 취득세 · 등록세 · 양도소득세 등 주택구입과 거래에 따른 세금 또한 대폭 감면하여 왔다.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체제에서 기인

이러한 지난 3년간의 노력에 힘입어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주택구매력이 회복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주택건설이 위축되어 공급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들어 시중자금이 주택부문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8월까지 매매가격은 6.4%, 전세가격은 12.9% 상승하여 지난해 증가율[매매(전국 0.4%, 서울 3.1%), 전세(전국 11.1%, 서울 13.8%)]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지역은 매매가격이 8.8%, 전세가격이 15.8% 상승하여 상승세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 참조).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시장 내적인 수급상황이 이사철을 앞두고 악화된 것과 더불어 거시경제 여건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저금리체제로 변화된 것에 기인한다.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수월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크나큰 변화를 불러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3년간 주택건설이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이 임대주택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고 전세수요마저 매수세에 가세하여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

다. 또한 최근 들어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소형주택이 재건축후 중대형주택으로 바뀌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소형주택의 매매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저금리의 영향은 전세시장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손실을 메꾸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수급불안이 심화된 결과 전세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세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에 월 1.6%에 달할 만큼 상승한 월세이율이 최근에는 1%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추세는 이사철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은행의 주간 단위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름방학이 종료되는 8월말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예년의 경우에도 봄 · 가을 이사철이 종료되는 4월과 10월에는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경험을 감안할 때 9월말부터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층의 전월세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기반 구축에 초점

주택가격 상승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민층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과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과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과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지난 8월 27일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지역별로 1,500~2,500만원 이하인 영세민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의 70%인 최대 2,45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서민에 대해서는 종전 5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던 한도를 6천만원내에서 70%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민들이 실질적인 보증금 지원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에도 전세자금의 70%까지 보증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제공자 등 일정요건을 충

〈표 1〉 주택가격 증가율(2001년 1~8월)

(단위 : %)

	전국	서울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	연립	단독
매 매	6.4	8.8	8.7	4.5	2.2	9.7	4.8	1.9
전 세	12.7	15.8	13.4	12.6	11.4	14.9	12.3	8.7

족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2배까지 보증이 가능토록 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함께 시행하였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였다. 올해 5월 23일 이후로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7천만원 범위내에서 집값의 70%까지를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손쉽게 내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충

앞으로는 서민들의 집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 정도로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7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서민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 10만호에 10만호를 추가하여 2003년까지 총 2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당초 계획분 2만5천호에 내년분 중 1만호를 앞당겨 총 3만5천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42만평에 해당되는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올해 계획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확충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이 중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지역에 9만호를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주택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사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소형주택이 크게 감소하여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형주택 공급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도입하고,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업체와 재건축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신도시 개발 등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폭등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내년과 2003년에도 매년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3년에는 주택보급률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의 가격불안 심리가 해소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표 2〉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재원조달 계획

(단위 : 호, 억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계
건설계획	2,500	20,000	10,000	35,000	52,500	80,000	–	200,000
재정지원계획	–	851	1,545	2,364	4,531	7,700	18,219	35,210
국민주택기금지원계획	582	4,660	2,330	6,175	12,967	22,230	–	48,944



이 원 종
충 청 북 도 지 사

대담 김인철 本誌 편집장

— 관선 서울시장 · 충북도지사 등을 지내시고 다시 민선 도지사가 되셨는데요. 지방행정에 대해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거 관선 충북도지사였을 때나 민선 도지사로 취임하였을 때나 150만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또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공직수행에 대한 자세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선지사와는 달리 민선지사는 지방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행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의 의지를 반영한 도정을 펼치는 일, 지역 · 계층 · 부문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일 그리고 충북인의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행정철학과 원칙 아래 1998년 7월 1일 취임과 더불어 '열린 미래, 희망찬 충

북'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경제활력 회복', '균형발전 촉진', '지역문화 창달', '열린 행정 실현'의 네 가지 도정방침 아래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경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도민의 주장을 대변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IT · BT 산업 육성을 충북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충청북도는 최적의 교통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고, 대청댐 상수도 개발로 용수 공급이 원만하여 IT · BT 산업의 기반을 모두 갖춘 최적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IT 중심지역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BT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창단지는 올해 286만평 규모의 단지가 조성 완료되며, 현재 전자정보관련 대기업 67개 업체(53%)가 입주를 확정하여 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분양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또한 오송단지는 국립보건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국가기관의 이전이 추진중에 있고 92개 업체의 입주를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141만평이 국가산업단지로의 일괄개발과 보상방침이 확정되어 내년 5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오창 · 오송단지에 첨단기업체 유치는 물론 이곳을 중심으로 한 산 · 학 · 연 · 관의 상호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보교환 등 지역의 교류 ·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르면 연말부터 30대 그룹의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이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창단지와 오송단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 정부의 방침은, 7개 IT 첨단업종 공장만 이전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것이어서 BT산업이 주력업종인 오송단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창단지는 이미 30대그룹의 하나인 하이닉스 반도체가 공업용지의 25%를 분양받은 상태이고,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절대 필요한 풍부한 공업용수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업체 유치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에 직 ·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해를 같이하는 비수도권과 공동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충남 · 강원 등 수도권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 관계법령 개정 추진을 적극 저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 해외세일즈 활동의 주 타깃을 IT, BT산업 외자유치로 설정하여 전방위적인 세일즈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외국인 투자총액은 1998년 대비 54%가 증가한 14억1,5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음성 소재 (주)동부전자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2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지난해 5월 한 · 독 합작으로 2억달러 규모의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 계획이 성사되어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유럽순방시 독일측과 2억달러 규모의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공항 외자유치, 이태리 프로젝트, 한 · 중 한의약단지 조성 등 대규모 외자유치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효한 시책이 되리라 보는데,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지 않고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조업체 수가 4,440개로 1997년 대비 122%가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의 경우는 255개 업체로 무려 2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도 지난해말 46억5천만달러로 1997년보다 121%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2,473개 업체에 벤처 · 창업 · 경영자금 5,167억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1,344업체에 344억원의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산 · 학 · 연 컨소시엄을 통해 472건의 특허 · 공정거래 · 시제품 개발을 하였고, RRC(지역협력사업), TIC(지역기술혁신센터), BK21(지역우수대학) 사업을 통한 특허 · 상품 · 기술이전 등 382건의 기술혁신도 추진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필요한 자금 · 판로 · 기술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애로를 찾아서 해결하는 토털서비스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지원시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면서 특히 해외시장 진출 지원, 노사화합 및 산업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행사내용과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 2002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청주시 주중동에 위치한 옛 종축장 부지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 바이오전문엑스포인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국내외의 유수한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오송단지를 세계적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를 비롯한 여러 국내기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2001' 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많은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위스 취리히 州정부와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파렌州, 니더작센州를 방문 참가의사를 얻어내는 등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 오송관에 우리나라 15개 시도별 부스를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엑스포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충북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 충청북도는 산업구조 · 지역경제 · 재정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발전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은 타 지역보다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할한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절실한 현안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엑스포장 진입도로와 진입광장 조성 사업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BT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오송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내년도 소요사업비와 2004년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충북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150만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사로의 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2004년에 오송역이 개통될 수 있도록 오송역사 건립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한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와 청주-상주간,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송강-백운간 국토 4차선 확장을 위해서 정부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21C 정보통신 ·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충청북도



이종배
충청북도 공보관

중원문화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의 향기가 숨쉬는 국토의 중심, 청풍명월의 본고장 충청북도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청주 · 청원 광역권의 오창과 오송단지를 거점으로 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IT · BT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자 용틀임을 하고 있다.

올해말 10년간의 대역사가 마무리되는 IT산업의 거점인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이미 20여개 업체가 가동 및 건축중이며, BT산업의 국가적 중심지가 될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내년 5월에 착공, 200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오송단지는 내년 9월에 개최되는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통해 국제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산업의 준비와 생명산업으로서의 과학영농의 진흥 그리고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따라가는 관광산업의 개발은 150만 전도민의 꿈을 실어 충청북도를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한반도의 개발 중심축으로 부상

역사적으로 보면 충북은 BC 400년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땅이었고, 삼국시대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요충지로서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최대 접전지역으로서, 백제는 지금의 충북 중부지역을 신라는 남부지역을 고구려는 동부지역을 관할했다.

고려 성종 14년(995년)에는 중원도, 공민왕 5년(1356년)에 충청도라 칭하고 도청을 충주에 두었다가 1908년 충주에서 청주로 도청소재지를 옮기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충청북도의 총 면적은 7,433㎢로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올 7월말 현재 150만명을 넘어섰다. 재정규모는 도와 시 · 군을 합해 총 3조231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134억원과 특별회계 6,09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충북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해 우리 도는 경기침체 · 폭설 · 태풍 · 가뭄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50만 도민과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해 발전 가능성과 논리를 강력히 확산하고, 지역발전의 의지와 열정을 드높여 21C를 향한 도약기반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우리 도는 한반도의 개발 중심축으로 새로

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종합개발과 연계하여 1999년에 수립한 '충북 CHANGE 21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산업 · 자원 ·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정보화 · 환경 · 사회복지 · 문화 · 농업 등의 6개 부문별 하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보은 · 옥천 · 영동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과 속리산 · 월악산 · 소백산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벨트 구축, 청주 · 충주 · 제천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지식산업벨트를 종합 반영하여 4대 발전축의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 ·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앞당겨 완공하고 주요국도의 확 · 포장을 마무리하여 국토중심의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고, 수송력 증대를 위한 고속철도망 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충북선과 중앙선의 전철화사업과 호남고속철도의 오송분기역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존폐위기에 놓였던 청주국제공항을 활성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청주국제공항은 바다가 없는 우리 충북으로서는 세계로 열린 유일한 窓이요, 오창과 오송의 IT · BT산업을 세계로 끌어올릴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항공기 운항이 1998년 대비 94%가 증가하였고 여객은 76%, 화물은 109%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중부권내륙 복합화물기지가 청원군에 건립중에 있어, 청주국제공항과 국토중심의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그리고 물류 기지가 조성됨으로써 충북은 21C 통합국토의 중추적 지역으로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과 정보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전 도민이 적응함은 물론 경쟁력과 함께 복지증진을 위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시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추진시책에 따라 그간 도내 103개 읍·면소재지에 초고속통신망 보급을 완료함(읍·면소재지에 초고속통신망이 개통된 것은 충북이 전국 최초)과 동시에 초고속 통신 백본망을 155M에서 2.5G로 32배 증속 보급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의 날'을 통해 230개 농촌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전 읍·면·동사무소에 '인터넷 까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이 지난해보다 무려 29배 증가한 19만5천회선으로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주민전용 교육장 설치, 방학을 이용한 학교교육, 주부인터넷 교육 등 교육확대와 도민정보화 확산 붐 조성이 큰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보화기반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정보화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정보화를 실천해가고 있다.

〈표〉 충청북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천명, %)

	IMF 이전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경제활동인구	668	671	667	675
실업률	1.6	4.9	4.2	3.0
산업생산지수	135.2	134.5	180.0	218.2
어음부도율	0.81	1.22	0.21	0.16
소비자 물가지수	110.1	118.3	119.2	121.6
수출(억달러)	38	31	39	47

전통적인 농업도인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e-고향'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도내 농촌과 전국 도시간 고향소식 등 각종 정보교환은 물론 전국에서 제일 청정도가 높은 충북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였다. 또한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16개 시장 5,600개 점포의 홈페이지를 구축, 상세한 가격동향과 시장동향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4개 국어로 각종 문화관광정보를 제공한 결과 관광객수가 36% 증가하는 성과를 일구었다.

그 밖에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 254개 아파트단지내에 사이버 아파트를 구축함으로써 아파트 시세정보 제공은 물론 주민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시책의 추진노력에 힘입어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정보화촉진 2년 연속 최우수도로 평가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IT·BT산업이 싹트는 희망의 땅 충북

몇해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45명의 미래학자들은 21C를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3T(IT, BT, ET)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과 흐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1C 핵심산업인 IT 산업과 함께 B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육성해 오고 있다.

IT산업 육성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부근에 1992년부터 총 면적 285만평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 현재 99%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이면 완료될 전

망이다.

IT관련업체의 집중 유치와 함께 충북대학교 이공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도 입주함에 따라 생산과 연구, 주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IT 전문 산업단지로 육성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주하기로 계약한 업체는 64개 업체로서, 이 중 10개 업체가 이미 가동중이고, 10개 업체는 공장을 건립중에 있다. 기업체들의 입주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단지 조성후 분양은 낙관적이며 향후 2~3년 후면 정상궤도에 올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BT산업의 중심지는 바로 경부고속도로 부근에 위치한 청원군 오송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다. 충청북도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141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미 국립보건원 · 식품의약품안정청 ·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3개 정부기관이 이전을 확정했고, 200여개 바이오관련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오송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내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며, 3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엑스포는 전국민적 바이오 산업의 교육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송국가생명산업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디딤돌로 만들 것이다.

엑스포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바이오 산업 관련 업체와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오송단지를 생명산업의 국가전략기지로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갈 야심찬 꿈을 갖고 있다.

아울러 오창 · 오송단지는 국내외 기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근 대청댐으로부터 풍부한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인근에 고속도로 · 철도 · 청주국제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또 청주에 16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여건으로 앞으로 기업체 입주는 희망적이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다. 지역 · 국가 · 세계의 변화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열심히 헤쳐 나가는 자만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비록 인구와 면적은 제주도 다음으로 작지만, 충청북도의 150만 전도민이 합심노력하여 IT · BT 산업의 세계적 메카로서, 국가발전의 중심지로써 도약하고자 전략적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희망의 땅 충북의 미래는 결코 지금의 작은 도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주5일 근무! 새 시대가 열린다



백일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이 전통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경쟁력의 원천이 생산요소의 투입량에서 근로자의 창의력과 직업능력으로 변화하고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이 비례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21세기에 우리 근로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인 연간 2,500시간에 이른다. 일본의 1,842시간은 물론, 대만의 2,285시간과 싱가포르의 2,445시간보다 많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양과 가격경쟁력에서 경쟁력을 찾던 종래의 양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사회체제 전반에 걸쳐 양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질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창의적 지식근로자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을 통해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때 생산성과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전 한 의류제조업체를 방문하였다. 그 업체는 외환위기로 어렵던 1998년 4월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외환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량의 4분의 1을 감소시키고 근로자 40명을 정리해고해야만 했다. 노사는 논의 끝에 정리해고 대신 주5일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노조는 임금동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근로자들은 개선된 근로조건에 만족하며 애사심을 키울 수 있었다. 이직률이 감소했고 업무 숙련도가 올라갔다. 이는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98년 35억원 적자이던 경영수지가 1999년 34억원 흑자로 반전되었고 2000년에는 60억

원, 올해는 7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시작된 경영혁신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노사관계도 최근 3년간 임금협상을 노조가 사측에 위임할 정도로 상호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가 구축되었다.

이 업체의 경우, 주5일 근무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살리는 윈-윈(win-win)의 성공전략이 되었다. 물론, 모든 회사에서 주5일 근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협력 여하에 따라 주5일제가 노동비용을 줄이고 생산성도 배가시키는, 相生의 전기가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시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임금상승은 2.9%에 불과하며, 일자리는 68만개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4.7%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경기침체의 회복과 고용증가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경영혁신과 노사 화합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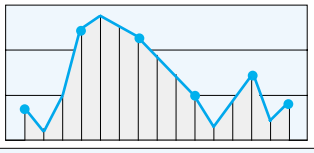
프랑스는 1998년 주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00년에는 16만5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앞으로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1995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성 증가, 삶의 질 개선, 3차 산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일본은 1994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였다. OECD 30개국 중 아직도 주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제 국내에서도 주5일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5,053개사 중 약 10%가 월 1회 이상의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중 81개사는 완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1%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찬성했으며, 77.2%가 주5일 근무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국민의 대다수가 주5일 근무에 찬성하고 있으며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5일 근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이다. 근로자·기업인·국민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노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 간다면, 주5일 근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성장과 경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5일 근무는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이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세계경제 동반침체로 우리 경제의 둔화 심화

송인창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서기관

우리 경제는 올해 1/4분기에 경기둔화세가 멈추고 다소 나아지던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들어서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경기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경기둔화세가 심화되는 이유는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해외수요의 위축이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부문에 타격을 주고, 그 여파가 국내 모든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7월과 8월의 수출증가율이 20% 이상 감소된 것이 최근 경기둔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 부문에 타격

이러한 경기둔화는 중국과 중동산유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해외경제의 둔화라는 충격에 잘 견디어내고 있다. 2/4분기 GDP 성장률을 보더라도 미국은 0.2%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했고, 외환위기에도 굳건히 버티었던 싱가포르는 −0.9%, 대만은 −2.4%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경제는 1/4분기에 3.7% 성장한 데 이어 2/4분기에도 2.7% 성장하여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될 경우 3/4분기에는 더욱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2/4분기 내수 중심으로 GDP 2.7% 성장

2/4분기에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2.7% GDP 성장을 이루는 등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했다. 이번 GDP 추계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요소가 수출에서 민간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4분기중 수출의 기여도는 4.5%p였으나 2/4분기에는 0.6%p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에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동 기간중에 0.3%p에서 1.5%p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IT산업보다는 비IT산업이 경제성장에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서비스업과 비IT산업이 비교역재를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이므로 해외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4분기 0.6% 증가에 이어 2/4분기에도 0.5% 증가하여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교역조건지수가 2/4분기에 6.2% 감소한 결과이며, 이렇게 저조한 실질총

생산의 증가가 3/4분기에 민간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던 재고투자는 2/4분기에는 0.3%p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기록하였다. 아직도 재고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이 지난해 2/4분기보다 작아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3/4분기에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경우에 재고비용 감소노력과 경제규모 자체의 축소로 재고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될 우려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3/4분기가 2/4분기보다 GDP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4/4분기에도 뚜렷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없는 한 당초 예상했던 5%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해외수요의 위축이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부문에 타격을 줌으로써 국내경제의 둔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될 경우 3/4분기에는 더욱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활동 위축 심화

7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6월에는 반도체의 급격한 생산감소로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7월들어서는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로 10.3% 증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기와 자동차 생산의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1.4%를 기록하였다.

7월중 설비투자는 10.3%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건설수주는 11.9% 증가하여 부동산 경기회복이 건설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기대를 낳고 있다. 국내소비를 대변하는 도소매판매는 증가율이 2.5%로 낮아졌으나, 다른 지표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모습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대폭 하락하여 경기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반면, 선행지수 전월차는 6월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올해 2월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가서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수출부진 심화로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7월중 수출은 114억9천만달러로 20.5% 증가하고, 수입은 110억9천만달러로 18.9%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1~7월간으로 볼 때 수출은 7.3% 감소, 수입은 9.4%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4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추이는 수출감소세가 수입감소세를 앞서고 있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7월에는 수출물량이 2~3% 감소하고, 원화로 계산한 수출증가율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생산과 기업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수입에 있어서는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축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무역수지 흑자폭

은 10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상황은 안정세 유지

7월중 실업률은 3.4%로 6월보다는 0.1%p 증가했으나 이는 방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구직활동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취업자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명목 임금상승률이 3.5%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초과근로시간의 감소폭이 확대되어 총근로시간 증가율이 전년동월비 −1.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6월 누계 명목임금 상승률은 5.9%로 전년 동기 8.8%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도 1.1%로 전년동기 7.1%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낮은 임금증가율의 영향으로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0.8% 증가에 그쳤으며 반면에 소비지출은 2.7% 증가하여 소비가 소득 증가를 앞서는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다소 확대

소비자물가는 8월 들어 전월 대비 상승폭이 0.5%로 전월의 0.2%에 비해 다소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은 주로 채소와 과실류 가격의 오름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반면에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으로 공업제품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앞으로의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중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3%p 상승하였다.

앞으로 전월세가격, 택시요금 등 서비스요금, 수산물가격 등의 동향이 소비자물가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9월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다가 10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는 소폭 하락하고 금융시장은 안정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금리의 소폭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금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위험자산에 대한 프리미엄 면에서 회사채의 신용등급별 금리격차는 우량물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소폭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행의 여수신 금리격차는 수신평균금리가 크게 하락한 반면, 여신금리는 소폭 하락에 그쳐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측면에서 보면 시장금리 하락 및 은행수신금리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신사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화의 움직임을 보면 단기유동성 지표인

〈표〉 최근 주요 실물경제지표

(단위 : 전분기 대비, %)

	1/4	2/4	5월	6월	7월
산업생산증가율	0.6	−1.5	−0.1	−1.9	−1.4
제조업생산증가율	0.4	−1.5	−0.1	−2.0	−1.4
반도체	1.1	−13.4	−1.6	−12.3	10.3
반도체 이외	0.1	3.6	0.4	1.8	−

M1+수시입출식 예금증가율이 7월에는 14% 초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MCT와 M3의 증가율도 소폭 높아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중 유동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7월중 각각 3조4천억원과 2조4천억원 증가하였다. 7월중 회사채는 전월과 비슷한 2조7천억원 순발행되었으나, 프라이머리 CBO(Primary CBO) 편입분을 제외한 공모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최대규모인 2조3천억원의 순발행을 기록하였다. 다만 그 용도면에서 설비투자용은 7.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상환 및 저리채 전환 등 부채조정과 관련되었다.

앞으로도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기대와 은행 수신금리 인하 등으로 제2금융권 수신이 확대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충되면 기업자금 수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8월 이후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원만하게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하에서 내실을 다지는 정책 필요

현재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볼 때 올해 안에는 3~4%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저성장이 우리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 잠재성장력이 큰 내수산업의 확대를 지원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경제 여건이 안좋을수록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이 중요해지므로, 경기활성화도 이러한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장둔화는 우리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저성장 기조하에서 실업과 기업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이러한 경기둔화를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다. 조급하게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무리한 경제 살리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의 성장둔화는 우리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저성장 기조하에서 실업과 기업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연합의 논의동향과 전망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프리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초국가적 연합체,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실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아프리카도 거대 지역공동체의 결성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11일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7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정례회의에서, 53개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新아프리카 이니셔티브(New African Initiative)를 채택하여 향후 1년내에 기존의 OAU를 AU로 대체시키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AU는 EU를 모델로 하여 정상회의, 집행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공동의회와 공동중앙은행, 사법기구를 구성하며 공동시장과 공동화폐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AU) 창설에 합의

1963년 32개 아프리카 국가에 의해 창설된 OAU는 회원국 수가 53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외견상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OAU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설립된 단순한 상징적 협의체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역내의 각종 분쟁과 인권 유린, 빈곤과 에이즈 문제에 대해 무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 아프리카 역사상 초유의 초국가적 연합체를 목표로 하는 AU의 창설은 OAU를 한 단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아프리카 지역 공동체의 설립 과정은 험난하였다. OAU는 1991년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의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재원 부족과 관련당사국 사이의 입장의 차이로 계속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9년 리비아의 가다피 국가원수는 제35차 OAU회의에서 미국과 같은 아프리카합중국의 창설을 주장했으나 가다피의 지역 패권 장악을 우려한 다른 국가들의 반발로 이 제안이 거부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연합체의 필요성을 느낀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7월 토고의 로메에서 열린 제36차 회의에서, 합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느슨한 EU와 같은 연합체의 창설에 합의하였고, OAU 정상들은 올해 3월 리비아의 시르테에 모여 AU 창설을 선언하였다. 각국의 비준절차가 (부분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제37차 루사카 회의에서 AU는 전체 아프리카의 동의하에 창설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AU의 창설이 아프리카인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하지만 AU가 이 지역의 통합과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은 더 많은 형편이다. 콩고와 브룬디의 내전, 짐바브웨에서의 흑인 폭동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독재, 정부의 정당성 문제와 그에 따른 정정 불안이 이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대표성마저 심각히 위협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뿐만 아니라 AU 창설을 주도하고 있는 리비아의 가다피는 미국입장에서는 기피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아프리카 제국으로서는 역외 주요국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위험도 있다.

>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회원국들은 지난 7월 기존의 OAU를 아프리카연합(AU)으로 대체시키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나 AU는 지역협의체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 회원국간의 이질성, 초보적 단계의 역내교역 수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회원국간 이질성 등이 아프리카연합 추진에 걸림돌

AU 창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아프리카가 공동의 초국가적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1999년 현재 7억6,500만명의 인구규모에 비해서 역내 지역 총생산이 5,300억달러(남아공을 제외하면 4천여억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가 짊어지고 있는 총 외채는 3,372억달러로 전체 지역총생산의 60%를 넘고 있다. 그동안 OAU의 국가별 회비도 일부는 리비아의 대납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강력하고 많은 책임을 부여받을 AU의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향후 AU의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AU가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EU 수준의 경제통합을 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회원국 내부의 이질성이 너무 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 총생산의 3분의 1을 넘는 남아공과 국민총생산이 그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개 국가들이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공존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나라마다 50배에서 70배까지 차이가 난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의 분포도 나라마다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국가별로 경제적 성과의 명암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EU와는 달리 실물경제의 통합 이전이라도 단일 통화를 먼저 도입하겠다고 천명하는 현재의 AU의 계획으로 보면, 단일통화하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지역간 성장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이다.

경제통합의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내 교역의 규모는 1999년 현재 전체 아프리카 국가 교역액의 9.4%에 불과하여 EU의 역내교역 비중 62.8%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역의 대부분을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EU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1999년의 경우 아프리카 무역의 EU의존도는

44%, 미국 의존도는 12.8%에 달하고 있다. 역외국과의 수직적 무역관계가 횡적인 경제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의 구조도 문제가 된다. 서방선진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은 원자재와, 생활필수품 및 첨단제품을 거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역내교역은 주로 원자재와 낮은 수준의 생필품을 맞교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역내교역에서 차지하는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그야말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직접 투자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한, 아프리카만의 공동시장이 구성될 때 야기되는 무역전환효과는 무역창출효과에 비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주목받을 만하다. IMF는 2001년에 출간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교역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관련당사국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그 방향은 첫째, 아프리카 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촉진하고 둘째, 미국과 EU의 對아프리카 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지난해 10월 공식 발효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미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섬유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 산업제품에 대한 무관세 · 무쿼터를 인정한 동 법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럽연합도 로메협정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국가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로 하였다.

〈표〉 최근 아프리카의 주요 지표(1996~2001)

	1997	1998	1999	2000	2001*
실질 GDP 성장률	3.2	3.2	2.7	3.2	4.1
인플레이션(%)	14.1	11.2	12.0	12.7	10.2
재정적자(GDP대비%)	−2.7	−3.6	−3.4	−1.0	−1.3
수출증가율(물량기준)	3.6	0.0	0.6	7.3	5.3
수입증가율(물량기준)	6.8	4.7	2.6	4.8	5.1
교역조건의 변화(%)	0.6	−11.3	8.6	15.7	−5.8
경상수지(GDP대비%)	−1.2	−4.5	−3.4	−0.3	−1.4
외채(수출대비%)	207.9	237.4	225.3	−	−
인구(백만명)	730.4	748	765.6	−	−
인구증가율	2.4	2.4	2.4	−	−
영아사망률(1천명당)**	82.2	77.8	76.4	−	−

주 : *는 추정치,
** 각국 영아사망률 : 한국 8, 미국 8, 일본 4(1995~2000)
자료 : AfDB, *African Development Report 2001*(summary), 2001

이러한 특혜 조치는 단기적으로 아프리카와 해당 선진국간의 교역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내부의 산업 역량을 강화시켜 역내 교역의 증가와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원조는 피원조국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AU 창설은 선진국에게 지원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3%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온 아프리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결합된다면 매력적인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국제원조가 성패의 관건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현가능성이나 통합의 가시적 효과가 불확실한 아프리카연합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기존의 OAU가 아프리카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무력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바꿔보자는 분위기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 ·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AU의 창설이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고자 함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는 피원조국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지난 30여년간의 원조가 피원조국의 빈곤해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유는 피원조국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피원조국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방식도 수혜국의 자조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AU의 결성은 선진국에게 지원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AU의 앞날은 험난하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래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 지역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3%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성장세가 정치적 안정 및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관심과 결합된다면 이 지역은 우리에게 원조의 대상이 아닌 매력적인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럴 때 AU의 결성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며 통합의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IMF 경제위기 이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재정수지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 가격하락 및 투자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가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제한적 경기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등 253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연간 전체예산 160조3천억원의 62% 수준인 99조6천억원을 배정하였고, 자금은 54% 수준인 85조7천억원을 배정하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등 253개 주요 투자사업(전체예산 21조 8천억원)은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82%를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에 힘입어 올 상반기 경제성장 3.2% 중 재정의 기여도는 0.7%p로 지난해 상반기 기여도 0.3%p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 기금 · 공기업의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 추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 일본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7월 1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 기금 · 공기업 등 재정전반에 걸쳐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8월 7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하여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3/4분기에 하반기계획의 57% 수준인 30조3천억원 집행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 기금 · 공기업의 주요 투자사업 중 3/4분기에 하반기계획의 57% 수준인 30조3천억원을 집행하는 것이다.

예산사업은 3/4분기에 당초계획(14조3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15조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방비확보 · 경영혁신 등 수시배정사업의 배정요건을 충족토록 조치하는 등 배정 및 수시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사업은 국민주택기금 · 정보화촉진기금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주요 사업성 기금(6개)을 중심으로 하반기 투자사업비의 70% 수준인 6조7천억원을 3/4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등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5조6천억원이 늘어난 14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4분기에는 당초계획(7조1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8조2천억원을 투자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 이후 추진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업계획이 기확정된 한전의 송변전 시설사업, 가스공사의 인천기지 확장 및 강원권 배관공사 등 약 1조원을 올 하반기에 신규투자할 계획이다.

〈표 1〉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적

(단위 : 조원, %)

	연간계획(A)	상반기실적(B)	B/A
예산배정	160.3	99.6	62.1
자금배정	160.3	85.7	53.5

지난해말 이후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82%를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결과 상반기 경제성장 3.2% 중 재정의 기여도는 0.7%p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하반기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불용 · 이월 요인을 최소화

정부는 지난 3년간 평균 10조원(일반 및 특별회계)을 상회하였던 불용 · 이월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추가적인 재원투입 없이 재정지출이 사실상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고, 낙찰차액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과 공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 및 공기업에서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용 · 이월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재정이 우리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8월 18일 개최된 시 · 도 부시

〈표 2〉 상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기여도

(단위 : %, %p)

	2000년				2001년		
	1/4	2/4	상반기	연간	1/4	2/4	상반기
GDP성장률	12.6	9.7	11.1	8.8	3.7	2.7	3.2
재정기여도	0.5	0.2	0.3	0.3	0.7	0.8	0.7

장 · 부지사 회의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활성화 대책을 마련 · 추진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집행점검반을 구성 · 운영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매칭자금 미확보로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추진과 관련된 인 · 허가 및 민원해결에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과 기금의 조기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 평가시 자금집행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추경예산과 재해대책예비비의 조속한 집행

지난 9월 3일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경예산과 재해대책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부금 정산분(2조원)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확보 등에 활용토록 유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5천억원) 중 1조3천억원 수준을 초 · 중등학교 교실 증축 및 고등학교 신설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예비비의 경우에도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다음연도 재해발생시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가급적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점검 시스템 강화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였다. 매월 회의를 개최[제1차(7.19), 제2차(8.21), 제3차(9.4), 제4차(9.19)]하여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 · 공기업별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이상 집행결과를 점검하고, 현장확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3~18일에는 재경부 ·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 · 토공 등 공기업 합동으로 사업규모가 크거나 집행이 부진한 25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실적을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과 집행과의 연계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선금제도 개선,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집행상 애로요인 해소

현장점검 및 집행실적 점검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집행상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금제도 개선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9월 4일 시행)하여 선금사용시 1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였던 것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절차를 완화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시중금리

〈표 3〉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단위 : 조원, %)

	연간계획	하반기	3/4분기		
			당초	변경	증감
예산(주요사업비)	84.4	29.0	14.3	15.4	1.1
기금(6개)	17.0	9.6	4.6	6.7	2.1
공기업(16개)	23.2	14.4	7.1	8.2	1.1
합 계	124.6	53.0 (100.0)	26.0 (49.1)	30.3 (57.2)	4.3

하락에 따라 각종 기금의 정책금리도 0.5~1.0%p 인하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기금은 7.5~9.0%에서 7.0%~7.5%, 산업기술개발자금은 6.5%에서 5.75%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6.0~6.5%에서 5.25~6.0%로, 중기창업 및 진흥기금은 6.75%에서 5.75~6.25%로 각각 인하하였다.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추진이나 부실공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부실공사 등 집행상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시 이러한 취지가 일선현장까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8월말부터 재정집행 활성화 효과 가시화

지난 두달 동안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산·기금·공기업의 집행실적은 20조7천억원으로 3/4분기 계획(30조3천억원)의 68% 수준이 집행되었다. 동 기간중 SOC 투자 등 주요사업비 예산은 14조1천억원을 배정하였고,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 기금(6개)은 2조3천억원, 한전·도공 등 공기업(16개)은 4조3천억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자금배정 기준으로 보면, 7월 한달간 7조7천억원, 8월 상순(8.1~8.15)에 4조8천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8월 하순(8.16~8.31)에는 7조4천억원이 집행되는 등 재정집행 활성화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은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 투자사업 중 3/4분기에 하반기 계획의 57% 수준인 30조3천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불용·이월 요인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과 재해대책 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추진하며, 집행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추가경정예산(5조1천억원)이 집행되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당국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집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부진 등이 우려되는 기금은 운용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연중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 재정집행 실적(8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연 간	하반기	3/4(A)	7.1~8.31(B)
예산(주요사업비)*	84.4	29.0	15.4	14.1
기 금(6개)	17.0	9.6	6.7	2.3
공기업(16개)	23.2	14.4	8.2	4.3
합 계	124.6	53.0	30.3 (100)	20.7 (68.3)

주 : *예산배정 기준

쌀산업 경쟁력 강화



김종진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쌀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식이며,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 산업이다. 쌀은 4천년 이상 우리 민족의 양식이 되어 왔으며,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해온 겨레의 양식으로서 단순한 먹거리의 의미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다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기반을 유지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는 등 변화된 양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04년의 WTO 쌀 재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양정 기조를 전환하고 사전에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쌀 공급량은 증가추세이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국내적으로는 1996년 이후 5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고, 최소시장접근(MMA;Minimum Market Access) 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 공급량은 증가 추세이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전체 재고가 늘어나 올해 10월말 재고량은 990만석 수준으로 전망되어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쌀 재고량은 1990년대에는 최고 1,487만석을 기록하는 등 5년간 1천만석을 상회하였으나 1993년 및 1995년 냉해 등 흉작으로 1996년 재고가 169만석으로 떨어져 큰 위기를 맞았던 경험도 있다.

참고로 1996년 3,696만석이던 쌀 생산량은 1998년 3,540만석이었고 지난해에는 3,674만석이었다. 또 최소시장접근(MMA) 규약에 의거 수입해야 쌀은 1995년에는 35만석이었으나 올해는 89만석이며, 오는 2004년에는 143만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1990년 119.6㎏이던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1995년 106.5㎏, 1999년 96.9㎏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93.6㎏으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WTO 출범후 정부수매의 제

약 때문에 최근 민간부문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민간유통에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 풍작에 따른 쌀 공급량 증가로 계절진폭이 축소(필자주 : 산지쌀값의 계절진폭은 1995년 11.2% → 1999년 7.9%→ 2000년 3.0%→ 2001년 1.3%)되어 민간유통 중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농가의 벼 판매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2004년 쌀 재협상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으며,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은 1999년 4월 쌀을 관세화로 조기 개방하여 현재 우리와 필리핀만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쌀 개방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동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매가를 인상해 온 결과 우리 쌀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는바, 우리 쌀값은 미국 · 중국의 6배, 태국의 9배 수준이다. 쌀 생산국들은 UR협상 타결 이후 수매가를 동결 또는 인하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직불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추곡수매 확대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양보다는 미질 중심의 정책 추진

이러한 국내외적인 양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정기조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선, 연속된 풍작과 소비량 감소로 금년도 수확기 쌀값하락 및 농가의 판로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우선 올 가을 쌀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정부는 올 가을 시중의 쌀 공급량이 늘어나는 등 수급 여건은 어렵지만, 정부 · 농협 ·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예년보다 매입량을 200만석 정도 늘려 총 1,325만석을 매입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쌀은 국내적으로는 1996년 이후 5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고, 최소시장접근 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 공급량은 증가 추세이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재고량 증가는 물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쌀산업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올해 정부의 추곡약정수매 575만석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미곡처리장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지원금리의 인하 등으로 550만석을 매입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미곡처리장 원료벼 매입자금 금리를 인하(5%→3%)하여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2001년 13억원→2002년 18억원)하는 한편, 올해 11월중에 종합미곡처리장 운영자금 3천억원을 특별지원하여 농가벼 매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일부 종합미곡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200만석 정도를 시가로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수확기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단경기에 시가로 방출하는 시가매입 · 시가방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종합미곡처리장 등 민간부문의 매입확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단경기에 가격이 회복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벼의 공매를 중단하는 등 시중 쌀 공급량을 적극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수확기 대책과 함께 2004년 WTO



종합미곡처리장(RPC)에서의 인증쌀 포장

쌀 재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WTO 쌀 재협상에서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2004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관세화 유예가 계속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다만, WTO 쌀 재협상은 2004년말까지 쌀 수출국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005년부터 관세화로 개방해야 되는 어려운 협상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양보다는 미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신품종 개발 및 종자보급 체계를 미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2005년까지 고품질 벼 재배면적이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생산조정제도는 앞으로 2~3년간의 수급 사정 및 2004년 WTO 재협상 결과를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되, 콩 등 자급률이 낮은 타작목으로 전작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차를 충분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전체 곡물 자급도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유지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면서 수매가는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WTO 협정에 따라 수매제와 같은 가격지지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매 보조금을 매년 750억원씩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매가를 통한 농가소득지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쌀값을 계속 인상하면 우리쌀의 국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부담이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수매가는 안정시키면서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하여 농가소득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해 쌀산업 경쟁력 높여나갈 것

정부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미작경영안정제 도입 검토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미작경영안정제란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하락분의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우리도 쌀값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선진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소득안정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안정직불제란 농가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농가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비상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약정수매제는 WTO협정에 따라 매년 줄어들어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2004년에는 수매량이 500만석 이하로 축소되는 등 정책적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공공비축제란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안보 목적의 적정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비축목표에 맞게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제도로서 2004년 WTO 쌀 재협상 결과를 보면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영농규모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가뭄·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비료·

> 정부는 우선 올해 수매물량을 지난해보다 200만석 정도 늘린 총 1,325만석을 매입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신품종 개발 및 종자보급 체계를 미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논농업직불제 실시 확충 및 미작경영안정제 도입 검토 등 제도를 보완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다.

농약 사용량 절감 등을 통해 친환경 영농을 정착시키고, 직파재배 확대 등으로 2004년까지 10a당 생산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5ha 이상 규모화된 쌀 전업농이 쌀 생산의 40%를 담당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쌀 소비 촉진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용 쌀은 올해 3월부터 신곡을 시중 쌀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미 도정도를 12분도로 조정하여 일반미 수준으로 미질을 향상시켰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묵은 쌀을 주정용 및 쌀 가공용 원료로 확대 공급하여 쌀 가공식품의 수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을 중심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우리 쌀 대축제행사 등 각종 홍보활동을 벌여 쌀 소비가 진작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의 쌀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대책은 향후 양정여건 변화 전망과 2004년 쌀 재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방법 등을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T산업 성장의 견인차, 전파산업

-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근협
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장

정부는 IMT-2000, 지상파디지털방송 도입 등 무선통신시대의 개막을 맞아 획기적 국내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파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적 비전, 진흥전략 및 시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지난 7월 수립 · 발표하였다.

전파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내 IT산업의 급성장으로 전파가 군사 및 유선의 보조용 등 한정된 특정 분야에서 벗어나 이동통신 및 방송에서 교통 · 의료 · 과학 · 치안 등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파 이용 추세를 살펴보면 1990년 무선국수가 22만국에서 1995년에 202만국으로 10배, 2000년에는 2,755만국으로 100배가 증가하여 매 5년마다 평균 10배씩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전파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전파통신산업은 1990년 1조3천억원에서 2000년 27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35% 성장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1.8%에서 2000년 5.2%로 확대되는 등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파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전파기술의 발전과 무선통신 위주의 IT시장 패러다임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파기술 개발 및 IT산업의 환경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 시장의 수요와 법 ·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전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파기술 측면에서 이동통신 기술은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 위주로 개발되면서 데이터 전송량과 전송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블루투스(Bluetooth),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광대역 무선 랜(LAN) 등 신규 광대역 무선엑세스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무선인터넷과 같은 무선데이터통신시장의 발전을

야기하였으며, 또한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등의 새로운 사업영역의 창출을 유도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新 전파통신인프라(new radio infra)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정책을 비롯한 관련 법 · 제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조기에 수립 ·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IT산업의 환경변화 측면에서, 역무간 경쟁체제의 심화로 일부 통신서비스사업의 퇴출이 발생하고 주파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국내 전파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구되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요청되었다. 또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무선통신과 데이터통신으로 전환되면서 전파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시장과 기업으로부터 인력양성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파산업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전파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그 역기능인 '전자파 인체 위해' 등과 같은 전파환경 문제의 해결도 정부가 조기에 확립해야 할 정책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전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계기 마련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파자원 개발 및 효율적 이용

전파자원 이용계획은 '밀리미터파 대역과 같은 未이용 전파자원의 개발', '협대역화 및 공용화 등을 통한 주파수 이용 효율화',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와 재배치'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부는 무선통신시대의 개막을 맞아 국내 전파산업의 획기적 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산 · 학 · 연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파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적 비전, 진흥전략 및 시책을 담은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지난 2001년 7월 수립 ·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파통신의 고속화 및 멀티미디어화 추세에 대비하고 부족한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대역(80GHz) 혹은 그 이상까지도 실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도가 높은 VHF/UHF 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대역화를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주파수 대역은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공동 이용제'를 도입하여 주파수 공유를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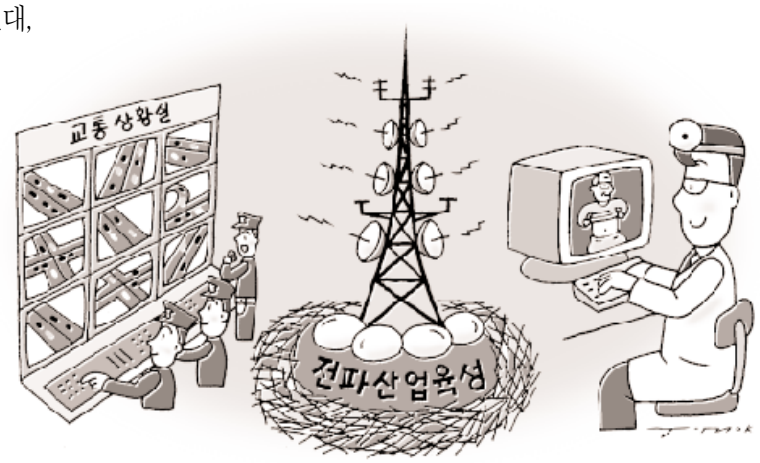
그리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주파수는 정부가 개입하여 주파수를 회수하고 이를 재배치하여 귀중한 국가자원인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도모할 계획이다.

새로운 무선사업에 주파수 할당 등 지원

전파이용산업은 전파통신산업 · 방송산업 · 위성산업 · 부품 및 소재산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의 첨단기술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파통신산업의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이용이 예상되는 新전파통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를 조기 분배하여 상용화를 유도하고, 핵심기술 확보에 정책역량을 집결하여 기술경쟁

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컨대, 블루투스(Bluetooth), 5GHz대 초고속 무선 접속망, 지능형교통 시스템(ITS), IMT-2000의 TDD, 고밀도 고정통신서비스(HDFS), 성층권비행선시스템(HAPS)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산업은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도입, 방송시설의 고도화 등을 통해 방송매체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과 서비스의 질적 · 양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방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기기와 콘텐츠산업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지상파, 위성 및 유선방송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법 ·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위성산업은 통신 · 방송위성 탑제체 및 주요 부분체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통신 · 방송위성 생산국가로 도약하고 부분체 및 주요 부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내수시장 진작과 동시에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부품 및 소재산업은 시스템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부품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고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입유발형 생산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파 전문인력 양성

전파산업의 급성장 추세로 향후에도 약 2만여명의 전파 · 방송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의 등장과 급속한 기술개발 속도로 인해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 연구인력 분야', '산업인력 분야', '공공부문인력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계 · 연구 분야의 경우, 전파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에 대한 지원 강화, 실험측정장비와 같은 기자재 지원을 통한 현장교육 강화, 러시아 · 동구지역의 전파 고급 인력풀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분야의 경우, 무선국시설자에 대해 현장실무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고급 현장인력 양성, 산업계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전파기술교육센터'의 설립 지원, 시간상 · 공간상 제약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이버 강좌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 분야의 경우, 공공분야의 전파통신종사자에게 전파법령 · 전파장해방지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최신 전파 ·

방송기술의 발전동향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교육기관의 파견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첨단기술 개발 및 전파이용자 보호

국내 전파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대 전파통신기술과제(무선단말기술, 무선시스템기술, 안테나기술, 전파환경 · 감시기술, 전파자원이용)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적 · 물적 지원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5대 전파통신기술과제는 잠재적 시장성 · 시급성 ·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을 응용한 R&D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연구목표의 달성도와 추진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파이용에 관한 각종 국내 기준을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시켜 선진국 수준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의 기지국 공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기지국 건설을 유도하여 선진국 수준의 전파이용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효율적 전파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파관리시스템의 구축, 국내외 주파수 이용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무선국 인 · 허가의 정보화 추진 등 전파자원의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통신 · 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파의 특성상 외국의 동향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바, 세계전파회의(WRC) 및 ITU-R, 국제전기통신표준위원회(IEC)/국제전자파장해특별위원회(CISPR)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 · 태지역국가간의 협력체제도 긴밀히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전파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전파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 새로운 무선사업 지원, 전파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및 전파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내 전파산업의 발전은 정부와 산업계 또는 관련기관 중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관 · 산 · 학 · 연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겨우 일정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굳이 '겨우 일정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전파의 특성과 향후 IT산업의 환경변화와 글로벌 경쟁체제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국내상황과 관계없이 국제기구 및 외국의 영향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파산업의 환경변화가 극심하고 기술개발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며, 경쟁체제가 심화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파산업이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 또는 관련 기관의 공동노력은 어쩌면 당연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이 국내 전파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개도국 우수 연구인력 유치



송우근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장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연구인력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Post-Doc 연구원의 50%인 2만7천여명이 외국의 젊은 과학기술자이며 공과대학 교수의 37%가 외국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과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40%가 외국인이며,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는 총 연구원 2,300여명 중 3분의 1인 800여명(현재 400여명)까지 외국인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라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연구활동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세계 7위권의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도국의 우수 연구인력을 연구개발에 활용

우리나라도 해외의 과학기술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를 지향하는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난 4월 제7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특정분야의 연구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연구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의 인력이 우리의 3D업종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듯이 개도국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의 특정 연구분야에서 크게 활동할 날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내에는 외국의 많은 젊은 과학자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느라 오늘도 밤을 지새우고 있는 현장도 있다. 우수한 젊은 과학기술인력을 개도국으로부터 확대 초청, 활용하여 우리의 연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상대국가에게도 수준 높은 과학기술인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대외기술협력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개도국과의 협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도국의 인력을 초청,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살펴보고 연구현장에 개도국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을 포함하는 개도국은 지난해 4.5%(전세계 2.9%)의 실질 GDP 성

장률을 보인 바 있고, 향후 몇 년간은 5.0%(전 세계 3.2%)의 GDP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2000년 1,727억달러)의 약 32%, 수입(1,605억달러)의 약 38%를 개도국과 거래하고 있어 그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기지 · 수출시장 ·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풍부하고 유능한 과학기술인력과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개도국과의 협력은 긴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가 개발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원조를 국제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는 당연하다고 본다(필자 주 : 1945~1995년간 우리나라는 무상 59억달러, 유상 187억달러 등 총 246억달러의 원조를 받음).

개도국은 지난해 4.5%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였고 향후에도 5.0%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우리 수출의 약 32%, 수입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 을 확충하고 생산기지 · 수출시장 ·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은 긴요하다.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운용

외국과의 인력교류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①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 활용사업(Brain-Pool) ②박사후 연수사업 ③외국인 석 · 박사과정 ④연수생 초청사업 ⑤외국인 산업연수제도 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등이 있다.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 활용사업은 박사학위 취득후 연구개발 분야에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우수 해외교포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단계의 최신기술과 노하우를 조기에 전수하고 국내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사후 연수사업은 국내의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연구활성화와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를 초빙하여 국내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표〉 개도국 연구인력 초청가능사업 현황

(단위 : 억원)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	박사 후 연수	외국인 석 · 박사	한-중 인력교류	한-러 인력교류
지원	170 (1994~2000)	23.7 (1994~2000)	6.2 (1996~2001)	9.1 (2001)	42.4 (2001)
실적	28개국 709명 -개도국 6개국 235명	24개국 225명 -개도국 17개국 171명	7개국 19명 졸업 (1998~2001) -개도국 3개국 12명	중국측 404명 한국측 293명	유치 546명 파견 56명
주관	과학재단	과학재단	광주과학기술원	과학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 : 과학기술부, 2001

외국인 석 · 박사과정은 지난 1996년에 외국과의 교육 및 연구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 개설, 운영해 오고 있는 과정이다. 석사과정은 정원의 15%, 박사과정은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 · 중 및 러시아 인력교류사업은 중국 · 러시아 등 동구권국가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해소하고 상대국의 강점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수생 초청사업은 개도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연수과정을 수립하여 연수기회를 개도국의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1년도에는 110개국(121개 과정)으로부터 약 2,300명의 외국인이 연수과정에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다. 연수기간은 2주 이내 82개(73.2%), 3주 내외 25개(22.3%), 50일 내외 9개(8%), 120일 내외 2개(1.8%) 등 대부분 3주 이내의 짧은 연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산업기술(컴퓨터 · 통신 · 환경 등)이 25개 과정 460명(20%)이고, 과학기술 분야는 6개 과정 112명(4.9%)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우리 중소기업의 3D 업종인 생산현장 중심으로 부족인력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14개 개도국으로부터 8만명까지의 산업연수생을 초청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은 국내 대학(원)에서 인문 · 사회 등 전분야의 학문을 수학 · 연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는 사업이다. 1967~2000년 동안 680여명이 초청되었으며 2001년 3월 현재 46개국 218명이 국내에서 수학중이다. 이 중 개도국유학생(26개국)은 118명, 자연과학 분야의 학생은 그 중 15% 정도인 33명으로 매우 미미하다.

연수생초청사업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국내의 연구활동과 연계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외국인 석 · 박사,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사업, 박사후 연수사업 그리고 외국인 장학생사업은 연구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직 ·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관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은 개도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완화시키면서 과학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선정 · 전문화하여 나가되, 제한된 협력 자원을 감안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주요 개도국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생연구원제도 도입 등 우수 연구인력 확보기반 구축해야

이와 같은 전략하에 개도국의 유능한 과학기술두뇌를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 ·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 수준별(계층별) 전략적 협력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석 · 박사 학생연구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여 우리 연구현장에서 부족한 석 · 박사급 학생연구원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 프로그램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레인-풀'과 박사후 연수사업과는 달리,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실험 · 실습 위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 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기술이전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의 기술개발 경험을 자연스럽게 전수함은 물론 우리의 부족한 연구능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험 · 전문성 · 대외 인지도가 높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부출연연구소가 동 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 연구기관장 명의의 비학위 증서(Diploma)도 일정 수준의 실험 · 실습을 마친 참여자에게 수여하는 등 참여자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논문박사학위 제도'의 도입을 중 ·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 제도는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 및 개발협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연구현장에서 개도국의 유능한 과학도들의 지적 역량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교육 제도상, 논문만으로 박사학위 수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위제도에 관한 관련법(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학교교육법 및 학위규칙에 의거하여 일본 학술진흥회를 통해 중국 · 인도 ·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온 과학도들에게 논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우수연구인력을 초청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미만의 개도국의 우수연구인력에게도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국내 연구시설도 개방하여 연구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 · 인도 등 과학강국형 개도국과는 별도의 양자간 박사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연수생 초청 사업에 과학기술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개도국의 고위정책 결정자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및 R&D관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 분야별 국제 세미나나 워크숍 등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여 정보 교류 및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 연수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이 중 · 장기 고급과학기술인력 교류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이 대학(원) 졸업 후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와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 활용사업, 박사후 연수사업, 외국인 석 · 박사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 학생연구원 제도 도입, 논문박사학위 수여,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연구개발 현장에 개도국의 우수 연구인력이 확대 활용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권고 수준(0.7% 이상, 1970년 UN총회결의)이나 DAC 21개 회원국 평균치(0.24%)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최저 0.1% 수준(1999년 0.079%)에는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ODA의 구성 면에서 미국(40%)이나 프랑스(34%), 호주(37%)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5.4% 수준인 ODA의 기술협력 비중을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ODA규모의 확대초점과 전략을 기술협력, 특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학 · 연구소 · 산업체의 연구개발 현장에 개도국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확대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 태평양 공동체 구축

- 올 APEC의 중점 추진과제와 우리의 참여방향



지혜양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상호 교역의 증대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APEC은 이러한 아 · 태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EU · NAFTA 등 세계경제의 지역화 및 블록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2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

APEC은 출범 이래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정상회의와 12차례의 각료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통상 · 재무 · 중소기업 · 인력개발 · 정보통신 · 교육 · 환경 · 여성 · 과학기술 ·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별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네 차례의 고위관료회의 및 11개 분야의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아 · 태 지역에서의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APEC은 '아시아 · 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궁극적인 도달점으로 삼고 있다.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역내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시키자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설정하였다. 이는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다.

WTO 뉴라운드 조기출범 방안 마련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최국(의장국)인 중국은 '새 세기 새로운 도전에의 대응: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주제로 하여 첫째, 세계화와 신경제의 이익 확산 둘째, 무역과 투자의 진전 셋째,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올 한 해 동안 APEC에서 논의될 세부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올해 개최되는 일련의 APEC 회의들을 통해 WTO 뉴라운드 조기출범을 위한 기여방안 마련,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지속적 추진, 인간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경제 · 기술협력 강화방안 강구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며 올해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중점 논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WTO 뉴라운드와 관련, 이미 지난

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2001년중 모든 회원국의 이해와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균형되고 충분히 광범위한 의제로 빠른 시일내에 뉴라운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가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직전에 열리는 만큼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 지지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은 앞서 언급한 보고르 목표를 신경제 및 세계화의 여건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고 있는 '상해 어코드(Shanghai Accord)'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상해 어코드는 미국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서, 보고르 목표 달성방안으로 지난 1995년에 채택되었던 '오사카 행동지침'의 개정을 통한 관세 인하, 회원국간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5년간 무역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해 어코드의 기본 정신에는 모든 회원국이 동감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제시된 11개 항목(미래지향적 개념 및 정책 틀 개발, 오사카 행동지침 확대 및 개정 등)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각국간 의견조율을 거친 후 올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간능력배양과 관련, 중국은 이미 지난 5월 북경에서 '인간능력배양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로서 베이징 이니셔티브를 채택한 바 있다. 베이징 이니셔티브는 신경제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정보화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인간능력배양의 핵심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업·교육훈련기관 3자간 포괄적이고 유연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역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서 제시할 계획이다.

>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세계경제 현황, 인간능력배양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 직전에 열리는 만큼 뉴라운드의 조기출범 지지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세계경제 현황, 인간능력배양 그리고 21세기에서의 APEC의 발전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다.

뉴라운드협상 출범 적극 지지

우리나라는 올 한해 동안 개최된 일련의 APEC 회의 참가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11월에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WTO 각료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만큼 APEC 회원국들이 뉴라운드 협상 출범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해야 함을 지적해 왔다. 뉴라운드 의제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WTO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어야 하며 반덤핑·투자 등도 의제에 포함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또한 제네바에서의 뉴라

운드 논의에 큰 진척이 없을 경우 올해 APEC 각료회의시 별도의 '특별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안한 바 있다.

상해 어코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한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관세 인하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이를 최종 문안작업에 반영시키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인간능력배양과 관련, 그동안 인력개발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한 표본으로 인식되어온 우리나라로서는 APEC 차원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APEC 사업의 상당수가 인적자원 육성 분야임을 감안하여 인간능력배양을 위한 포괄적 추진방안을 담고 있는 베이징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 우리 제안사업의 성과 제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APEC 회원국간 공동번영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격차와 정보격차 해소가 시급함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해 APEC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식기반경제 활성화, 사이버교육 협력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APEC 활동을 주도하여 왔는바, 우리가 제안한 사업들이 올해 APEC 활동의 주요 성과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은 2000년 3월 APEC 서울포럼'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서 1997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 사회적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초 설치된 '사회안전망 특별 작업단' 활동을 통해 긴급시 역내 국가들이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역내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식기반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난 1998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안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21세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식기반경제의 활성화방안 연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정상 ·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정보 웹사이트 설치, 지식경제 촉진정책 발굴, 지식경제지표 도입의 3개 정책권고안의 구체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이를 종합하여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정보 웹사이트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올해 설치를 완료할 것이다.

사이버교육 협력사업 역시 'APEC 서울포럼'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서 회원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 인터넷 봉사단 파견의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5월 사이버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8월에는 40명의 우리나라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 인터넷 봉사단을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시범적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우리의 사이버교육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4개 사업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이버교육 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인간능력배양을 위한 베이징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방안으로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 여성의 IT 능력배양, 전자정부 구축 등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제안은 올해 APEC의 중점 논의주제인 '신경제에의 대응'

에 부합하고, 그동안 우리 제안사업의 일관된 관심사항이었던 IT 시대에의 적응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반영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특히 2002년 4월 개최 예정인 해양장관회의는 2002년 9월 남아공에서 개최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에 대비한 역내 의견조율과 우리나라의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제반활동 통해 국익 극대화

일부에서는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을 위하여 APEC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APEC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APEC이 창설된 지 이제 겨우 10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오히려 구성회원국의 경제 · 문화적 이질성을 존중하면서 경제기술협력과 자유무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단계에 진입한 APEC의 성장속도는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APEC 내에서도 회원국간 공동체의 실질적 혜택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 청소년의 APEC 활동참여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교역에서 APEC 회원국과의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이며, 무역흑자는 총 14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회원국의 對韓 투자와 우리의 對APEC 회원국 투자비중이 각각 60.5%와 70.5%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APEC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APEC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개방 · 개혁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추가부담 없이 APEC개도국에 대한 시장확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뉴라운드 출범의 적극 지지와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광범한 의제 설정을 강조할 것이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 지식기반경제 활성화 등 우리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올 APEC 활동의 주요 성과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APEC이 우리 교역과 해외투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아 · 태지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APEC 활동참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인 APEC은 우리의 안보외교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PEC이 지니는 이러한 경제, 정치 · 외교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APEC의 제반활동을 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APEC의 창설을 주도한 나라의 하나로서 APEC이 아 · 태지역 공동체 형성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더욱 확고히 발전해 나가도록 APEC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기상기술 발전 비전’ 수립



이종국
기상청 기획과장

지난 7월, 서울과 경기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른바 게릴라성 폭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내리는 비는 그 지역편차가 매우 극심하였다. 서울 북한산에는 예년 강수량의 다섯달치에 달하는 무려 51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강동구에 내린 양은 그 5분의 1인 116.5mm에 불과(결코 적은 양은 아니지만)하였다. 시간당 99.5mm의 폭우로 서울의 저지대는 물론 가로등 침수로 감전사까지 일으킨 7월 15일 새벽의 집중호우는 37년 만의 기록적인 호우였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논밭이 타들어가는 9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시름은 얼마나 컸던가.

기상기술 한계 극복 위한 비전 수립

최근 두달 동안 이 국토 안에서 전개된 기상상황의 격차가 이렇듯 극에서 극을 달리는데, 기상청에는 지역별 강우량의 총량까지도 정확하게 예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기상 예보와 경보가 타이밍이나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나무랄 데 없이 정확해져 惡기상으로 인한 재난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는 것일까. 장담하건대 불과 4반세기 안에 이러한 기술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것이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꿈에 실천적으로 도전하는 ‘기상기술 발전 비전(MT Vision 2025)’을 최근 확정해 공표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조선시대 세종23년(1441년)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여 강우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상기술을 실현하였다. 이는 이탈리아의 베네데또 카스텔리가 제작한 우량계(1639년)보다 무려 198년이나 앞선 것이다. 비가 내릴 때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다는 것은 과학사에서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법칙성을 찾는 것이 과학일진대 그 관찰에는 좀더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다. 17세기 서양에서는 과학이 폭발하듯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의 하나가 바로 그런 정확한 관찰방법의 확립이었다. 우량계뿐만 아니라 온도계 · 기압계 · 습도계 등이 이때 나왔는가 하면, 정확한 시계도 만들어져 여러 실험에서 시간을

재기 시작하였다. 이런 측정장치가 거의 다 17세기부터 서양에서 나왔지만, 우량계로서의 측우기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측우기는 세계과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우리 역사의 쾌거이자 자랑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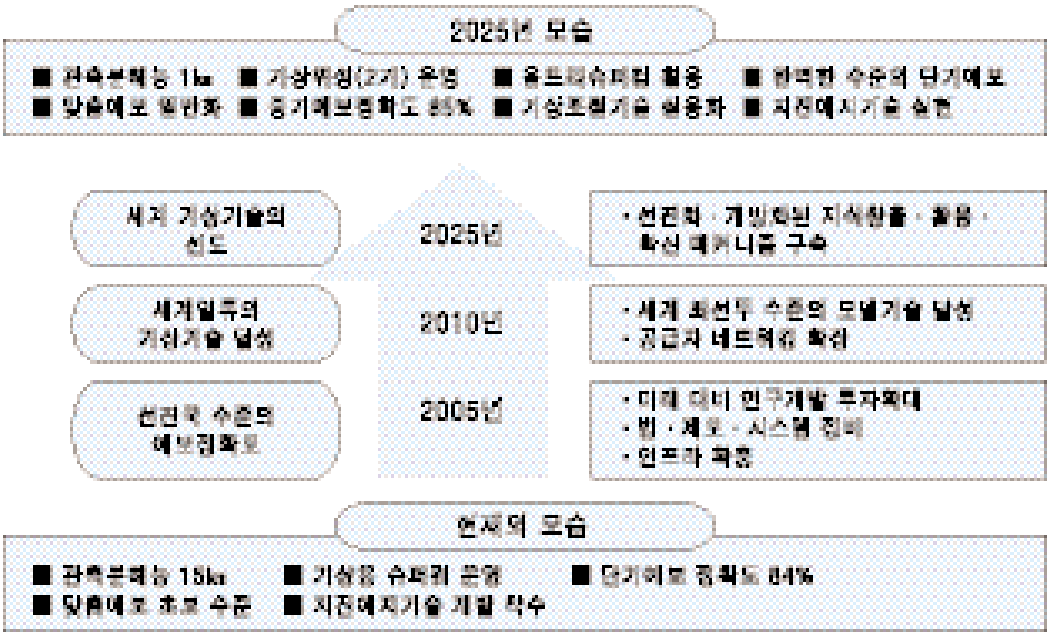
우리 기상기술은 1904년 부산 등 5개소에 임시관측소 설치를 계기로 기상관측을 시작함으로써 근대 기상업무의 뿌리를 내렸고, 점진적이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 자동관측망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상용 슈퍼컴퓨터도 갖추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선진기술을 모방하며 토착화를 시도함으로써 기술현대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기상청은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예보정확도를 실현하고, 2010년까지 기상 관측위성을 쏘아 올리며, 2025년엔 세계 수준의 기상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재해를 저감하고 제반 기상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기상기술 비전을 확정·공표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예보정확도 실현하고 기상기술의 활용도 크게 높일 것

우리나라의 기상기술은 관측분해능 15km 규모의 관측시스템과 기상용 슈퍼컴퓨터 등의 인프라를 갖춘 가운데 단기예보의 정확도 84% 정도, 민간예보사업자에 의한 맞춤예보는 초보수준, 지진예지기술 개발을 이제 막 착수한 단계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대기과학기술은 선진국 그

〈그림〉 기상기술 발전 장기비전



룹과 10.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조기에 추월 체제로 전환하여 세계정상의 기상기술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기상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05년까지 미래 대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법 · 제도 · 기상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의 예보정확도를 실현할 것이다.

제2단계로 2010년까지 기상관측위성을 우주궤도에 쏘아 올려 운영하고 세계 최선두 수준의 모델기술을 달성하며, 기상정보 공급 네트워킹 확장과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킹을 이룩하여 세계일류의 기상기술을 달성할 것이다.

제3단계로 2025년까지 선진화 · 개방화된 지식창출과 활용 및 확산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의 기상기술을 선도할 것이다. 관측분해능을 1km 규모로 정밀화하고 기상관측위성을 2기로 확대할 것이다. 울트라 슈퍼컴퓨터 활용으로 정보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단기예보 기술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재해저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민간예보사업자 등 기상정보 공급 네트워킹의 확대 · 고도화로 맞춤예보가 일반화되고, 중기예보 정확도는 현재의 단기예보 수준으로 향상되어 국부창출을 도모하는 등 그 활용성과가 크게 확산될 것이다. 나아가 인공강우는 물론 안개소산기술이 실용화되고 집중호우나 태풍의 감쇠기술 등 기상제어기술도 상당수준으로 향상되며, 지진예지기술도 실현되어 지진 대비능력을 높여 지진으로부터의 공포를 완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전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첫째, 관측분해능을 1km 규모로 높여 중규모 기상현상을 정밀하게 감시 · 관측함으로써 예측능력을 크게 높이고 둘째, 세계정상의 수치예보 기술과 지구환경변화 예측기술을 구현하며 셋째, 국민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용기상정보를 고급화하고 다양화할 것이다. 넷째, 수요현장 중심으로의 기상정보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다섯째, 기상조절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함으로써 재해를 저감하며, 나아가 앞으로 야기될 물 부족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창조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여 국가연구개발 목표를 조기에 달성

〈표〉 기상기술 장기발전 주요지표

		2000년	2005년	2010년	2025년
관측분해능(수평, km)		15	10	5	1
수치모델 분해능(수평)	전지구모델(km) 미세국지모델(km)	55 5	30 3	20 1	10 1/10
기상예보 서비스	단시간예보(인터벌)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	6시간 3일간 정량적 8일 월간 · 계절	3시간 3일간 정량적 8일 6개월	3시간 3일간 정량적 8일 12개월	1시간 5일간 정량적 14일 2년
슈퍼컴퓨팅(TFlops)		0.2	10	200	26만
기상전문인력(석 · 박사, %)		19	35	50	70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년)		−10.3(1999년)	−5	±0	+1~2

하고 일곱째, 기후예측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지구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여덟째, 황사 등 대기환경 감시와 예측기술을 고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아홉째, 지진예측기술을 실현하여 지진으로부터의 공포를 완화하고 열번째, 영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인프라를 튼실하게 구축할 것이다.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수요 중심의 기상서비스 모델도 개발

사회 변화의 주 요인인 기술 패러다임은 유동성 · 네트워크 · 속도 · 연결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와 다원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질서를 가능케 하였다. 앞으로 글로벌화 · 지구촌화는 더욱 진전될 전망이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과 향상된 대응성을 갖춘 정책기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비전에서 제시한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기상정책 기조에 충실할 것이다.

첫째, 미래에 대비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사자의 자식 사랑은 우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초원의 제왕이 가진 생존전략이 바로 선택과 집중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역량의 확보 가능성이 있는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다. 독일에는 산업기상기술이, 러시아에는 인공기상조절기술이, 유럽 중기예보센터에는 미국보다 앞선 예측기술이, 호주에는 위성자료 분석기술이, 일본에는 위성기술과 수치예보기술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전문분야를 전략적으로 키워 나아갈 것이다.

둘째, 재원 조달을 위해 세계화 · 지방화 구현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대형 국제공동프로그램의 경우 국제 공동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특화사업인 경우에는 중 ·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비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경쟁력이 높은 전문분야의 전략적 육성, 국제 공동조달 및 지방재정을 동시에 활용하는 재원조달 방안 강구, 기상기술력 평가체계의 완비, 수요 중심의 기상서비스 모델 지속 개발, 연구개발의 지속적 확대 및 세계화를 적극 도모해 갈 것이다.

셋째, 기상기술력 평가체계를 완비하여 전략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기술을 조기에 추월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 최상의 기상기술을 달성하여 세계 기상계를 선도할 것이다.

넷째, 수요 중심의 기상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맞춤 기상서비스 등은 민간부문 공급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켜 끊임없이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

다섯째,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의 지속적 확대 및 세계화를 도모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연구개발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높은 교육열로 매년 많은 연구개발 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연구잠재력을 가진 많은 연구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세계 일류의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특허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감동

최규완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지난 6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 혁신사례로 뽑혀 기획예산처 ·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특허청의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대부분의 조직들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무구조를 지식 중심으로 바꾸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정보화를 추진하는 등 경영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을 향한 움직임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허청은 이러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와 지식기반경제사회라는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고 특허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1999년 7월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허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증대

특허청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도록 특허청의 임무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최대 현안이었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였으나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식의 창출 · 권리화 · 활용 등 '지식창조 사이클'의 제도적 인프라 등이 취약하여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는 등 특허기술의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였으며 전자상거래 · 생명공학 등 신기술 출원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수준은 미흡한 편이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일반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급속한 대내외적 특허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특허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재도약의 필요성 증대라는 배경하에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은 탄생하였다.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



책'은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특허행정',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특허행정',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특허행정'의 3대 비전하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계제일의 심사·심판 수행' 등의 12대 시책, 66개 중점과제 및 총 46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468개의 세부실천과제는 소수의 직원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한 결과로써 얻어진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66개 중점과제별로 과장급을 추진반장으로 하는 74개의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서기관·사무관 및 6, 7급 직원이 추진반원으로 참여하여 해당과제를 추진해 가고 있다. 전직원의 참여하에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work plan)을 수립·추진하여 특허행정의 총체적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 혁신 종합대책의 요지이다.

민간경영기법 도입한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 추진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전략을 마련하였다.

총체적 품질경영체제의 도입

특허청은 정부부문에서는 최초로 민간경영기법인 총체적 품질경영 즉,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총체적 품질경영은 QM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QM은 품질(Quality)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다른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품질만은 반드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경영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을 보면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과 납기도 동시에 충족되는 상품만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즉, 품질을 중시하되 가격과 납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품질을 총체적 품질(Total Quality)이라 하고, 이 총체적 품질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을 총체적 품질경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허청에서 '참여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이 혁신 추진반이다. 추진반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을 이원적인 구조(dual structure)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어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조직과 유기적 연계를 갖는 팀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규모 팀조직은 다양한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추진반 회의를 통해 해당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도출하여 행정부서에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세부실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있다.

학습조직의 구축

총체적 품질경영과 더불어 최근 특허청이 일관되게 지향해 온 것은 특허청의 학습조직화이다. 학습조직이란 '조직 내외적으로 정보를 발굴 · 입수하여 조직의 전구성원이 공유함은 물론 일상적 업무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조직 전체에 전파 · 보급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처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조직 자체의 성장 발전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특허청의 경우 모든 업무는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체계는 추진반과 실무부서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독특한 업무처리 방식과 연계되어 전직원이 시스템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데 매우 유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계선조직과 소규모 팀조직이 병존하는 이중조직하에서 해당업무 경험자들의 추진반 참여로 조직구성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여러 부서에 소속된 반원들의 토론으로 全社的 차원의 정책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서간의 벽을 허물어 추진반과 기존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지식경영의 실천

지식경영이란 지식의 창출 · 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하여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경영방식이다.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정보사회로 이전함에 따라 지식은 권력의 원천이 되고 지식의 생산성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을 가장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경영전략으로서 지식경영이 탄생하였다.

특허청은 다른 부처보다 앞서 특허전산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과 재원을 집중 투자한 결과 정보화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수준에 진입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주무기관으로서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타 기관보다 앞서 인식하게 되었다. 지식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IT 기반 즉,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허청은 세계수준의 특허넷시스템, 각종 검색시스템, 인트라넷시스템, 홈페이지 등의 정보인프라가 훌륭하게 구비되어 있다. 인트라넷상의 지식창고와 추진반별 주간실적 코너 모두가 지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식이 교류되는 물리적 기반이 되고 있다.

사이버 특허청 구축 등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

특허청은 이러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을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특허청을 구축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

특허행정 전과정을 전자화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안방출원시대를 개막한 결과 지난해 전자출원율은 87. 6%에 달하였고 출원 · 심사 · 등록 등 모든 과정을 전자처리하여 지난해 전자결재율은 95.5%를 기록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하여 대전 본청과 서울사무소간 심사 · 심판관 화상면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17개 지방 특허정보지원센터와 대전 본청을 연결하였으며, 직원 월례조회도 화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허전산시스템의 세계표준화를 선도하여 브라질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특허넷 수출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3월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전세계 특허전산시스템의 한국형 통일화를 추진하여 이미 일본 · 중국 등에서 우리의 특허넷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둘째, 2001년부터 특허청은 기존의 타율적 심사관리방식을 폐지하고 심사관별로 목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심사제도로 전환하였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화상회의 시스템

이는 심사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심사의 질(quality)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심사관의 자긍심을 회복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심사관 · 심사과장 ·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2001년 4월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심사제도는 심사의 질과 공정성, 심사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허청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의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대외에 보급함으로써 국가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허청은 대부분이 박사, 기술사, 기술고시 출신인 400명의 기술심사관과 그들이 심사과정에서 체득한 전문 기술지식 및 7천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특허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특허심사에만 활용하지 않고 최신기술 동향 파악과 경쟁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의 노력 끝에 특허청의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계선조직에 의한 일차원적 업무처리가 팀조직을 활용한 다차원적 업무처리로 바뀌었다. 또한 주로 기관장의 지시에 의한 톱다운(Top-down)식 의사결정방식에서 과장 중심의 미들업다운(Middle up-down)의 의사결정방식으로 변하였으며, 과거 조직에 대한 낮은 평가가 조직에 대한 자부심 향상으로, 고객개념의 부재에서 고객감동의 행정추구로 크게 바뀌었다.

이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료주의적인 정부에서 기업가적 정부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특허행정 혁신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기관이 되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단체수의계약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서기관

본 심결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8월 10일 제1소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신문공표 포함)와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위반내용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1998년 4월 13일부터 2000년 9월 30일 기간중 한국화학연구소 등 9개 기관이 단체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자동제어반'에 대한 물량배정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단체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당해 물품을 생산·납품할 수 있는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물량 배정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신청을 받은 뒤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미리 개별 수주활동을 통해 정보를 사전입수한 일부 조합원에게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하였다.

또한 동 조합은 생산조합원간의 연간배정 비율을 산정한 연간배정기준표에 따라 물량을 공정하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최근 1~3년간 물량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임의로 무배정업체를 선정하거나,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 중 대표업체가 무배정업체를 지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수의계약 건별 물량배정 금액의 10%를 무배정업체에게 배정하였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이라 함) 제9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조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그 물량을 배분하여 납품케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은 154개에 이른다.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조합이 공공기관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그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물량배정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컴퓨터시스템이 이용되는 자동제어장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감시 · 계측 · 제어 · 기록 및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시스템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주로 지하철 구간, 상하수도 시설, 건물관리 등에 설치되어 이용된다. 자동제어반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는 총 175개사 정도이다. 자동제어반을 포함한 제어장치는 반제품 상태로 건축물 등에 내장되므로, 그 특성상 국내 시장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천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개요

■ 규제의 필요성

공정거래법(이하 '법'이라 함)상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통상 '협회' 또는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사업자단체는 그 소속 구성사업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 구성사업자들을 위해 설립된 이익단체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통제하거나 담합하는 구심체가 되는 등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또한 많은 편이다.

사업자단체들은 그동안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그들의 행위가 해당 업종 또는 산업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관계법령에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관계로 소비자나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인식을 하지 않고 사업활동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폐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됨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별 사업자에 의한 경우보다 그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될 일정한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하여 그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내용 및 법적 근거

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제1호),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제2호),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제3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7조 및 제28조는 사업자단체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도 포함)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반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기간중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 혹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거나 부

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위반이 된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하면, (가) 표준가격·기준가격·할인율·이윤율 등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인상 및 인하율(폭)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에 대한 수출입 추천, 원료구입추천량 등을 제한 또는 차별 취급하는 행위 (다) 객관적·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별하는 행위 (라) 장비의 도입처·도입자금 등을 제한하는 행위 (마) 신제품의 판매승인 거부, 판매시간 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바)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 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장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로서 허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하면, (가) 해외시장 동향, 국내외 경제동향 등 객관적인 통계의 작성 (나) 회원업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교육훈련 (다) 산업능률 향상 및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가격·품질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 됨) 등이다.

또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사업자단체의 결정이 설령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반드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님), 불황극복이나 산업합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 행하는 공동행위(법 제26조 제2항), 소규모사업자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조합 등의 행위(법 제60조)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이 된다.

단체수의계약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위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7호) 제20조(계약관련 정보의 통지)에는 "조합은 구매기관의 단체수의계약물품 구매요구가 있으면 동 계약정보를 일정기간을 두고 해당 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신청한 사업자에게만 물량배정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사전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나머지 사업자들이 물량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동 조합은 물량배정에 있어서도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물량배정의 일반원칙)가 '조합은 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연간배정기준표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배정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물

량을 배정하는 등 물량배정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당한 물량을 배정받아야 할 다른 구성사업자의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케 한 것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판단하고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및 제28조를 적용하여 시정조치(신문공표 포함)와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위반내용을 조달청 ·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였다.

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사업자들의 전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특정한 구성사업자를 위한 단체의 운영이나, 관계법령이나 정해진 내부규정과는 관계없이 조합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업활동의 내용을 조정하는 행위는 조합의 설립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사업자단체들이 흔히 명분으로 내걸고 행하는 '구성사업자를 위한다'는 막연한 의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오히려 건전한 사업활동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수주물량의 배정 등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부규제는 철폐하고 완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정부규제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된다.

반면에 각종 대형 사고에서 보듯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정부의 감시 내지 규제의 소홀에 기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민간부문이 공정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 내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시장이 만능인 것은 아니다. 시장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그 주주와 종업원뿐 아니라 경제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독점적인 대기업의 횡포는 때로 정당한 경쟁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규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예를 들어 금융의 건전성 규제는 시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IMF 위기를 맞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금융의 건전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아울러 환경 · 보건 · 산재예방 · 시설물 관리 등 국민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출처 : 「우리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재정경제부 · KDI 경제정보센터刊, 2001.3

공단폐수 배출로 인한 벼 피해

안승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이 달에는 공단 입주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공단입주업체의 폐수배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 21 인은 평소 농업용수로 사용해 오던 A 공단 인근 B 천에 2000 년 4 월부터 동 공단과 연결된 우수토구를 통해 공장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벼가 폐사되고, 논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우·오수관로 관리와 영농지도 책임이 있는 C 시와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인근 5 개 업체를 대상으로 벼 피해 금액과 피해 논의 객토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 총 4 억 4,450 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C 시는 문제의 우수토구 인근 지역에 대한 관로 조사결과 오접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0 년 7 월 C 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벼 뿌리의 생육상태가 나빠져 즉시 신청인들의 논에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 5 개 업소 중 D 산업은 구리함유 폐산·폐알카리를 회수하여 폐액 중의 구리는 황산동으로 제품화하고, 잔여폐수는 알카리성 구리 부식액으로 재생하므로 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폐산·폐알카리는 탱크로리로 직접 저장탱크에 자동주입하고 있고, 저장탱크에서 생산공정으로의 이송도 자동화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E 금속은 구리함유 폐수가 발생되기는 하나 일일 폐수 평균배출량이 1.34 ㎥에 불과하며, 폐수처리 과정을 거쳐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F 기계 등 3 개사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관계전문가 의견, 관련문헌 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벼 피해에 따른 책임비율

을 D산업, C시, 신청인이 각각 60%, 30%, 10%로 하여 D산업과 C시는 총 7,587만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고, C시는 피해 논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분쟁지역은 C시 신길동에서 발원 주거단지 및 반월·시화공단 사이를 경유하여 시화호로 유입되는 유로연장 약 11km의 신길천 주변 지역이고, 동 신길천은 시흥시와 C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일부와 A공단내 신길동·성곡동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며, 신청인들은 약 20년 전부터 신길천 물을 양수하여 벼농사를 해오고 있었다.

신청인들이 구리 함유 폐수가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A공단 인근 우수토구 상류지점과 신청인들의 농업용수 양수지점 하류에는 각각 물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갈수기에는 동 우수토구 외에는 물이 유입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문제의 우수토구와 가까운 블럭에는 피신청인인 D산업 등 약 28개소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신청인들이 피해배상을 신청한 5개 공장은 관계기관의 점검결과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용제류 유출 등으로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 신청인 벼 피해 및 논 토양 오염 현황

구리 함유 폐수가 신길천 우수토구를 통해 최초로 유입된 2000년 4월초 신길천 물을 양수해서 사용한 신청인 ○○○는, 모 고사현상과 2000년 7월 장마 후 벼이삭이 나올 시기에 벼가 죽는 현상이 발생하여 C시 농업기술보급소에서 2000년 7월 벼를 확인한 결과 뿌리가 검은색으로 썩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시에서는 2000년 7월 발생된 수해 등으로 인한 벼 침수농가 생계지원비로 798만원을 지원받아 2000년 12월 신청인 21개 농가 중 7개 농가에 지급한 바 있었다.

신청인들의 벼 피해 지역 수량조사 요청에 따라 C시 농업기술보급소에서 2000년 10월 수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 중 18명의 논 99필지에서 총 1억139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고, 신청인 중 3명의 논은 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 3명은 인근 정미소의 최근 3년간 도정량 확인서에 의해 일부 피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논 토양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피해지역 논 토양을 분석한 결과 신길천 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회 이하 사용한 논에서는 구리성분이 6~14mg/kg로 검출된 반면, 신길천 물을 계속 사용해온 5개 논에서는 33~229mg/kg까지 검출되었고 카드뮴(Cd), 납(Pb), 비소(As)는 모두 기준치 이내에서 유사한 농도로 검출되었다.

올 7월 C환경출장소에서 2000년 10월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던 3개소를 포함 4개 논의 토양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구리성분이 26~137mg/kg까지 검출되어 전반적으로 오염도는 감소되었으나 3개 논은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공단조성 당시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고, 생활오수와 개별 공장의 처리폐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관로 오접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구리는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000년 4월 25일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신길천 교량 하부지점에서 구리성분이 308ppm으로 검출되었으며, 3일 후 우수토구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구리성분이 616ppm으로 검출된 점 등으로 볼 때 논에 잔류된 구리성분은 신길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함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논 토양에 함유된 구리성분은 벼 생육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건의 인과관계

■ 폐수배출로 인한 벼 피해 여부

A공단 인근 우수토구에서 청색 물이 신길천으로 유입되고 논 물을 양수하기 시작한 2000년 4월 이후 C출장소에서 3회에 걸쳐 시료를 분석한 결과 우수토구에서 구리성분이 4월 28일 1차 616ppm, 2차 72ppm으로 검출된 바 있고, 신길천 교량 하부지점에서도 4월 25일에 308ppm과 4월 28일에 511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3ppm을 훨씬 초과하여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9월 동 우수토구와 교량에서 각각 구리성분이 미량만 검출되었으며, 2001년 6월 현장조사시 채취한 시료에서도 미량만 검출된 점 등으로 볼 때 2000년 4월 당시에는 인근 공장 등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고농도의 구리함유 물질이 신길천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0년 10월 신청인들의 요청에 의해 신길천 물을 사용한 피해 논 7개 지점과 신길천 물을 사용하지 않은 인근 3개 논의 토양을 비교 분석한 결과 10개 지점 모두 구리 · 납 · 비소 등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으나, 신길천 물을 계속 농업용수로 사용한 5개 논의 구리오염도는 최저 33ppm에서 최대 229ppm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길천 물을 1~3회 사용한 2개 지점과 신길천 물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 논에서는 구리성분이 6ppm에서 14ppm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된 바 있다.

그리고 토양에 구리성분이 과다 함유되었을 경우 뿌리의 성장 저해와 잎 황화 현상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의 벼 피해는 동 우수토구를 통해 고농도의 구리함유 폐수가 유입된 신길천 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른 결과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구리함유 물질 배출 여부

C환경출장소에서 2000년 4월 수차례에 걸쳐 우수토구를 통하여 신길천으로 유입된 물을 분석한 결과 구리농도가 우수토구에서 72~616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보아 고농도의 구리 폐수가 원인불명의 사고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우수와 섞인 폐수의 구리농도가 상기의 농도라면 고농도의 폐수

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 중 고농도의 구리함유 물질 배출이 가능한 D 산업과 E 금속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우수가 최종 배출되는 공장내 맨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 금속의 우수맨홀 상등액에서는 구리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으나, D 산업에서는 상등액에서 구리가 7ppm으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침전물 시료에서는 구리가 981ppm 등으로 검출됨에 따라 고농도의 구리 함유 물질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우수토구를 통해 신길천으로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C시의 책임 여부

C시는 반월공단 인근 우수토구를 통해 청색 물이 신길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청인의 신고를 받은 후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분석과 영농지도 및 대체 농업용수의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C출장소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지도 책임이 있는 C시도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정내용

2000년 10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피해 논의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신길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계속 사용해온 4개 논에서 구리성분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2001년 7월 4개 논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종전 초과지역 3개소 포함)에서도 3개 지역에서 구리성분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양 복원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논이 신길천 주변 6개지역 약 104필지에 달하는 넓은 면적으로 현재 전체 논의 오염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토양복원 조치 여부는 전체 논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다시 조사한 후 적절한 복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등 18인은 C시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실시한 피해 논에 대한 수량조사결과 산출된 금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되, 7인에 대해서는 수해에 따른 벼 피해 명목으로 지급받은 생계지원비를 피해금액에서 차감하고, 피해정도가 조사되지 않은 3인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므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인들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수토구에서 유입되는 청색물이 인근 공장의 폐수일 수도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 신청인들의 과실 비율 10%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벼 피해에 따른 책임비율을 D산업, C시, 신청인이 각각 60%, 30%, 10%로 하여 D산업과 C시는 총 7,587만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고, C시는 피해 논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물류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이병근
재정경제부 생활물가과 서기관

우리나라는 연간 15조원의 물류비를 교통체증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4대강국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는 네덜란드가 유럽의 물류 중심지가 되는 입지조건과 비슷하다.

유럽의 물류 중심지 암스테르담의 교훈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센터로 성장하여 왔다. 자원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큰 항구를 개발하여 일찍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세계의 꽃 시장을 리드하는 화훼 경매장이 축구장 크기의 규모로 스키폴 공항 옆에 설치되어 매일매일 다량의 꽃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주요도시의 꽃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노틀담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럽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 되어 대규모 창고 시설단지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화물이 콘테이너에 포장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나 중앙아시아 횡단철도(TCR)를 타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면 현지 법인의 창고 속에 들어가 유럽시장으로 공급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국은 한국이 적지라는 지형적 조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가 나오고 있어, 네덜란드와 같은 미래의 물류산업 육성 · 지원이 요망된다.

앞으로 조만간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한 대규모의 물류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본격적으로 물류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될 것이라 하니, 물류 산업이야말로 외화도 벌고 싼 가격에 좋은 물품을 쓰게 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한 한국경제는 대량생산과 많은 인력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급과잉이 되어 시련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꾸준히 추진하여 경영의 틀을 다시 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속한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국내외 수급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통해 물류산업 발전방안 찾아야

21세기 세계화 경제시대는 국가간의 국경이 개방되어 자유롭게 시장원리에 따라 상품이 수출입된다. 따라서 선박 · 철도 · 항공 · 자동차를 통한 수송이나 보

관창고의 재고관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김치 · 라면 · 전자제품이 북한철도를 지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되는 鐵의 실크로드(Silk Road)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계 교통망이 재편성되어 미래의 지구촌 시대가 신속히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는 크게 성장하여 인력 · 물품의 모든 분야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대량생산의 과잉상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구조조정이라는 질적인 발전방안과 대외수출이라는 적극적인 시장개척 방안이 있다.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 물류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이동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가 왔다. 유통업자가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여 제조자의 지위가 낮아진 21세기 물류혁신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실로 미래는 IT산업과 물류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개방경제 시대에는 물류산업이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시장을 공급자가 아닌 물류 관리자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철도 · 항만 · 공항 · 도로 · 물류터미널 · 창고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물류종합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3자 물류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그동안 정적이고 폐쇄적이었던 한국경제는 분명히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 러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큰 경제물동량을 지닌 중국은 한국의 항구를 통해서만이 태평양 · 인도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

멀지 않아 세계시장 주도할 중국

최근 중국의 경제는 연 8%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6천여년의 전통을 배경으로 大國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우선 지도자들이 인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솔선수범하는 공인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전국적으로 경제개발의 물결이 한창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앞서가고 있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 많이 배우고 따르고 있지만, 결코 쉽게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앞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서면 주변국을 비롯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할 생산량과 소비량을 모두 갖출 것이 분명하다.

비록 북경시내의 많은 도로가에 한국의 현사시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고 농촌의 논에서는 한국의 밀양 벼종자가 보급되고 있으며 '한류(韓流)'라는 문화풍속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머지않은 날에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물이 바다로 육지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몽고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건조한 봄철이 되면 어김없이 날라오는 黃砂는 그 피해가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함께 근본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과제이다.

중국이 주변국과의 경제 · 문화교류와 함께 황사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길은 환경농림업의 첨단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벌거벗은 황토땅에 풍차를 돌려 생산된 전기로 멀리 양자강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관정을 깊이 파서 물을 끌어올려 살포함으로써 목초와 숲을 이루어가는 대규모 환경 농림사업을 인접 국가간의 협력과

UN 환경기구의 도움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개량수종을 식목하여 사방사업에 성공한 전례를 참고하여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꼭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대규모 녹화사업이다. 이는 장래 물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유익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서쪽 우루무치 변방에서 횡단철도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서역의 길은 일명 鐵의 실크로드라 불리운다. 끝없는 황무지의 지평선을 향해 기차로 34시간을 달리는 장시간의 여행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우랄 · 天山산맥의 萬年雪을 바라보며 여행한 오지의 표준 · 광궤철도는 극기훈련의 추억만들기라 할 수 있었다. 인류 60억 인구가 함께 모여 종합체육대회를 하여도 여유가 있을 정도의 허허벌판이었다.

필자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배낭여행으로 이 코스를 꼭 달려보도록 권하고 싶다. 좁은 국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여행하면서 세계와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로프스크 · 모스크바 · 바르샤바 그리고 베를린으로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비교적 긴 정차시간이 없이 눈덮인 자작림 숲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유럽까지 11일이 소요되는 긴 여행의 코스이다.

특히, 고려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해주와 흑룡강 주변의 늪으로 된 평원은, 척박한 토양이지만 개발하면 미래의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을 조달하는 창고가 될 수도 있는 미지의 땅이다. 이 지역은 앞으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원활한 물류 수송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많고 땅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교육 · 훈련된 인적자원과 개발된 과학 · 기술과 자본의 수출을 통해 새로 개척해 나갈 미래의 새 터전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 · 발해의 고토경영 슬기를

고구려는 수 · 당나라와 싸워가며 만주 · 시베리아 · 요동 ·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큰 국토를 개척하여 경영하는 역사상 큰 기록을 남겼다. 그 뒤에는 발해가 같은 지역에 세워지고 고구려 유민 등이 다시 뭉쳐 강대국이 됨으로써 海東盛國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기상과 혼이 담겨 있는 진취적인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지금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땅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토지의 매입 · 임차를 통해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펴나갈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니 다시 우리 경제의 터전으로 활용하는 개척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그리하여 백두산 · 압록강 · 두만강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터전이 확대 전개되는 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밤낮없이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중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이제는 선진국을 향해 발돋움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본 · 기술 · 인력 ·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물꼬를 북방대륙으로 열어 중국 · 러시아 · 몽고와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는 개척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